

정신대 자료집 V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1995. 3. 3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
5

0

0000158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전후 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1995. 3. 3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KM001035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전후5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334.4 한16쪽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마치고...

1995년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는 일본군'위안부' 당사자들과 필리핀, 대만, 일본, 한국 대표들이 모여 진행되었다. 회의는 2월 27일에 시작하여 3월 1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행한 수요시위를 마지막으로 폐막하였다.

당초 참가하기로 한 북한 대표가 참석하지 못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또다시 분단의 아픔에 직면하게 하였지만, 북측이 보내준 발표문을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을 또 다시 다짐하게 하였다.

금년은 해방되지 어언 50년이요, 3.1 독립운동이 일어난지 76년이요, 한일협정이 체결된 지는 30년이 되는 해이다. 그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조직된지 벌써 5년이 되는 해이다.

5년 동안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자국 정부와 관련이 없었던 일본 정부가 앞뒤가 맞지 않기는 하나 '관여'를 인정하고 연행과정과 위안소 안에서의 강제성도 부분적으로 인정하였다. 문제는 전쟁범죄이자 중대한 인권에 반한 죄를 저질렀으면, 법적으로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현재 그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려는 데 있다.

1994년 8월 31일 일본의 무라야마 총리는 '침략행위'요 '식민지 지배'가 피해자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죄를 지은 주체인 국가가 책임을 지지 않고 '국민모금'이라는 형식으로 정부의 죄를 국민에게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다. 일부 국회의원들, 장관들과 극우들은 국회의 사죄와 전쟁반대에 대한 결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런 와중에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열게 된 것이다. 이 문제를 아시아 피해국이 연대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느껴 지난 92년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후 3년만에 제3차 회의를 다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다시금 일본 정부의 민간모금 구상을 철회시키고 국제법적 해결을 촉구하는 아시아 피해국의 연대의 장이 되었다. 또한 제3차 회의는 올해 8월 30일부터 9월 1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하나의 큰 이슈로 부각시키는 준비자리가 되었다. 베이징대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제기하는가 하는 것은 이번 아시아연대회의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달려 있었다.

이와 같이 복합적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의인 만큼 각국 대표들은 진지하게 준비해 온 발표문을 내 놓았고, 참가자들은 열심히 토의하였다.

지금 회의를 끝내고 돌이켜 보건대 아시아의 피해국들이 앞으로 어떻게 운동을 구체적으로

펼쳐나갈 것인지, 서로 어떻게 연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토론이 됐어야 했는데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런 약점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이 운동이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단계 성장했다고 평가한다. 일본을 포함해서 아시아에서 참가한 피해국들은 같은 입장에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운동을 펴나가기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참석한 일본군'위안부'들이 이성적으로 문제타결에 협력한 것도 큰 성과 중에 하나이다.

구체적이지는 못했으나 아시아 여성들의 입장이 정해졌으니,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 참가해서 한 목소리로 이 문제를 알려 세계여성운동과 연대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 이번 회의는 여러 면에서 의미 깊은 1995년에 열린 대회였다. 앞으로 그 열매를 맺어 주었으면 한다. 그래서 다음 아시아연대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일본 정부가 '위안부'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개인배상을 한다는 안이라도 발표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으면 한다. 동시에 모든 진상이 밝혀져서 역사가 빛을 보고 '오늘과 미래의 여성의 인권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창조하는 큰 계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번 연대회의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두고 끝낼 수 있도록 협력해 준 각국의 대표들과, 필리핀에서 온 전 일본군'위안부'와 우리 나라의 '위안부'들, 국내에서 참가한 모든 대표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실행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1995년 3월 23일

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차 례

- 2 **피내면서** : 윤정옥 공동대표
- 6 **인사말** : 이효재 공동대표
- 8 **격려사**
이우정 국회의원
이세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용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
박종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연옥 서울여자대학교 이사장
- 17 **각국 발표 1 왜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는가?**
- 19 **일본** : 이시카와 이츠코
- 25 **재일교포** : 양영지
- 30 **필리핀** : 줄리아 포라스(전 일본군'위안부')
- 33 **필리핀** : 넬리아 산초
- 36 **북한** : 홍선옥
- 40 **남한** : 김순덕(전 일본군'위안부')
- 42 **남한** : 김경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 45 **대만** : 유 팡 샤우

47	각국 발표 2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49	북한 : 최금춘
53	필리핀 : 넬리아 산초
56	재일교포 : 김영희
61	대만 : 첸 이 첸
63	일본 : 쓰부라야 교코
68	남한 : 지은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79	찬조발언
79	말레이시아 할머니 사례발표 : 마쯔이 야요리
84	95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 활동보고 : 신혜수
88	종합토론
90	결의문
92	3.1 아시아연대회의 결의 집회
95	아시아연대회의 일정 및 참가자 명단
101	사진으로 보는 제 3차 아시아연대회의
107	부록 정대협 활동일지

우리의 결의와 연대를 다짐하면서

이 효 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1차 서울회의, 그리고 제 2차 동경회의에 이어 우리는 다시 서울에서 이 연대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리핀에서 할머니 한 분과 함께 두 분이 오셨고, 일본에서 우리와 연대하는 단체의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의에는 대만 여성들이 네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우리 할머니들과 그리고 또 여러 내빈들과 정대협 회원단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을 아주 착잡하고, 유감스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할머니 1분과 여성들이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 7명의 참가단 뿐만 아니라 홍선옥 씨, 최금춘 씨 등이 발표할 것이라는 발표자 명단까지 보내 왔기 때문에 우리들은 크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북한 대표단의 불참소식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참으로 슬픔입니다. 동시에 우리민족의 분단에 대한 아픔과 슬픔을 다시 깊이 느끼게 됩니다.

전후 50년에 서울에서 열리게 된 이번 회의는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은 우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이 문제를 제기한지 5년이 되는 해이고 세계 제2차 대전이 종전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이며, 우리 민족이 식민지에서 해방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일본 정부는 종전 50주년에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범죄를 시인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며 민간위로기금의 형식으로 이 문제의 성격을 은폐하고,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일본 정치인들, 국수주의자들의 여론은 이 문제의 해결을 반대하는 모임들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의를 더욱 더 굳게 하여 일본 정부와 정치인들, 국수주의자들에게 우리의 큰 힘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특별보고관들의 조사활동이라든가, 금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있게 될 북경세계여성대회 등 우리들이 금년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가 다시 한 자리에 모여 일본 정부의 정의로운 해결을 촉구하며 일본

정부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사죄하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함께 노력할 것을 결의하고, 연대를 다짐하는 모임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연대회의를 통해 우리 모두 전후 50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힘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뜻있고, 힘있는 회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을 고발하고, 함께 연대하며 끝까지 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 우 정
(민주당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서 오신 친구들, 환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회 외무위원회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외무위원회에서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좀 미묘한 문제가 생기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과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과거는 과거에 묻어두고, 미래지향적인 외교를 펴시다. 미래지향적인 국교를 수립합시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방패처럼 내세우는 말입니다.

그 때마다 저는 말합니다. "과거를 똑바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결코 바람직한 미래는 창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엄격하게 따지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 잘못이 미래의 역사에서도 다시 반복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아주 끈질기게 정신대문제를 따지고 있습니다.

요새 한국에서 본격적인 페미니즘 영화가 나오는데, 그 중에 (네은 속에 노을지다)라는 페미니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남자가 아무리 여자를 사랑해도 여자의 아픔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여자의 아픔은 그만큼 더 넓게, 더 깊게 있는 것이다'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한 부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을 주면서도 그게 뭐 아프냐 하며 모르는 계층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인 문화현상 혹은 병리현상인데, 이것을 시정하려면 고발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난 병이고, 이렇게 해서 고쳐져야 한다는 것, 아프다고 소리지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정신대할머니들이 그 고통을 당하셨지만, 고발을 안하시면 그냥 묻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흔히, '좋은 게 좋지. 지나간 것을 뭘?' 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잘못은 잘못이라 외치고, 아픈 것은 아프다고 외쳐서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고발정신,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대협은 이것을 끈질기게 붙잡고 요구하는 고발정신을 발휘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아프다고 혼자 아무리 고발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아픔이 내 아픔이라는 연

대감, 우리가 합해야 해결된다고 하는 연대감, 그것을 여러분이 발휘하셔서 한국내의 연대만이 아니라 아시아의 여성 전체가 여기에 공감을 해서 연대모임을 한 것, 이것 또한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대가 이제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강제노동의 규약에 어긋난다 해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ILO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여성만의 연대가 아닌 남성과의 연대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로써 이 문제가 인간을 학대하는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의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에 대해 저는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한번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고, 대사관 앞에서의 시위도 10명이 나오거나 30명이 나오거나 3년 동안이나 꾸준히 하는 것, 이런 꾸준한 힘이 결국은 무서운 불의, 이러한 잔악한 행위를 이 땅에서 추방하리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싸워주신 정대협과 아시아연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렇게 싸워주세요" 하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후 50년이 되는 금년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 세 중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일본이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분명히 국제법적으로 봐도 심각한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또한 요즈음 인권문제가 한 나라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초월하여 인류가 함께 추구해야 될 보편적 가치의 문제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금년 안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 소신입니다.

일본이 세계 제 2차 대전때 많은 한국인과 아시아인들을 전쟁에 강제로 동원하고 징용하고, 또 여성을 강제로 성노리개로 삼았다는 것은 분명히 국제인권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현재 ILO가 채택하고 있는 여성인신매매금지에 관한 조약이나 또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에도 분명히 위반되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ILO에 가입한 이상 우리나라도 ILO의 국제규약을 성실히 지킴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모든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해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전쟁책임을 시인하면서도 그 전쟁책임에 따르는 여러 가지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는 이중성 때문에 지금도 아시아 지역의 전쟁피해 당사자들이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전후배상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일본변호사연합회와 긴밀하게 연대를 하면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반드시 일본 정부가 책임을 지고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또 그 피해 당사자들에게는 마땅히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의견이라는 책자를 바로 지난 1월달에 내서 이것이 유엔 인권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변호사연합회 내에서 이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이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달에는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한테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우리는 냈습니다. 그기에 대해서 외무부장관으로

부터 답변이 나왔는데, 이 문제에 대한 우리정부의 태도가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라는 데에 대해서 몹시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간에 1965년에 체결된 한일조약에는 정부간의 책임에 관한 것은 면제가 되었지만 개인에 관한 것은 그 정부조약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 일본 정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사죄를 하면 개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권리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에게 속한 권리는 개인의 권리이지 정부가 그 권리행사를 포기하거나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법률상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권리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야지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라든가, 그밖에 전쟁피해자들의 권리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에게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게 전쟁피해자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률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다." 하는 의견을 이미 낸바가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봐도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부간에 체결된 조약은 조약이고, 개인의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이것을 마땅히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일본 정부에게 요구하라"고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위해서 일본변호사연합회에서 IFOR(International Fellowship of Relation)로 파견되어 있는 도츠카 에츠로 변호사와 대한변협이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유엔에 있는 인권고등판무관실에 있는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을 한국에 파견해 달라고 정식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년 중에 그 분이 직접 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기타 전쟁피해 배상문제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가 되어서 이제는 국제법에 의한 판단을 받아야 할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전후 50년이 되는 금년에는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그 동안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의 원한이 풀어지고,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보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활약이 더욱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새 세상을 열기 위한 연대를 !

박 용 길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

오늘 이 자리에 대만, 필리핀, 남한, 일본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를 다지게 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유엔과 세계교회협의회, 국제법률가협회, 또 세계 여러 정의로운 단체가 발벗고 나서 주신 것에 대해 당연한 것이라 생각되긴 하지만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까지도 북에서 참가단이 올 줄 알고, 마중 나갔다가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온 여러분들의 그 섭섭한 마음, 헤아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슨 이유로 오지 못했는지 잘못할 그런 사연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사는 우리들은 통일된 새 세상을 만들고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여러 가지 가슴아팠던 쓰라린 역사를 그냥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파헤쳐서 해결하고, 백일하에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 후에야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함께 참석한 피해자 할머니들의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할머니들의 고통을 이겨내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숨겨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픈 곳을 건드리면 더 아프니까 그냥 묻어두자고 해서 안됩니다. 아프지만 아프게 하는 것을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아픔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들의 아픔은 단순히 본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민족전체의 문제이고, 아시아민중들의 문제이며 더 나아가 이 세상 모든 여성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노해야 됩니다. 분노가 바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죄하며 배상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북아에 평화로운 질서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아시아에서 오신 여러분께 한국 분단의 쓰라림과 여러 가지 아픔을 이해하시고, 멀지 않은 장래에 우리도 세계유일의 분단국가라는 오명을 씻고, 뜻뜻하게 동족들끼리 서로 만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 속히 오도록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박 종 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친애하는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와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대표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각국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이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개최하는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 아낌없는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해방 50주년을 맞이하여 범민족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기로 했으나 참석하지 못한 북한측 대표여러분에게는 섭섭하고 유감스러움을 전하는 바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일본이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만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을 고통과 악몽 속에서 삶의 의미조차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십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치욕스런 과거의 역사로 묻어두어서는 안되리라 믿습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해 나가야겠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과거범죄에 관련된 자들의 처벌은 물론이거니와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명예회복과 충분한 배상을 요구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한국노총에서는 정대협과 공동으로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금년 95년도 전국대의원 대회에서는 무라야마 수상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채택하여 곧 이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노총에서는 ILO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저촉되는 일본군의 만행을 공식적으로 제소하는 등 국제적인 대응책도 함께 세워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도 민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치유해 나간다는 뜻에서 이 문제를 비롯한 노동관련활동을 노총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올해로 3번째 개최되는 연대회의가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므로써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격려사에 기뻐하고자 합니다.

존엄한 교훈을 남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연 옥
(서울여대 이사장)

오늘의 모임을 한국의 장로교여성들이 정성을 모아 건축한 이 여전도회관에서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 참으로 의미있고,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깊은 감회를 느끼게 됩니다.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끝난지 5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으나 그 전쟁으로 인한 고난의 역사에 희생당한 분들의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별한 뜻을 가진 분들이 긴 세월동안 날이 갈수록 더 강력한 연대의식을 형성하여 연합해서 오늘의 이 모임까지 이룬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일본의 군국적인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제연행이라든가 고문, 학살 등의 잔악함, 더군다나 여성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인간성을 말살한 만행에 대해서 일본은 깊은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생당한 분들의 한을 풀고, 아시아 여러 나라와 진정한 이웃이 되어 참된 평화를 구축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현대사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이라는 하나의 무서운 사건은 자연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므로써 사회가 혼란해 지고 인간의 행복을 송두리째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후대에게 역사적으로 증명하므로써 전쟁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강한 교훈을 주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임이 무엇보다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일본의 군국주의와 같은 독재 권력을 남용하는 일을 역사적으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존엄한 교훈을 남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사건 배후에 승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 모든 행한 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이 지은 죄가 역사의 어두운 그늘에 은폐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경은 죄를 고발하고 그리고 분노하라고 말씀합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지나간 역사의 사건이라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뜻 있는 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까지 수고한 보람이 있어 앞으로 반드시 목적을 이룰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오직 한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를 고발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주셨기 때문에 이 모임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앞으로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의(義)로 받으면서 기도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격려에 대합니다.

한겨레그림판

(95.3.2)

박재동



<한겨레 3.2>



일 정부에 위안부배상 촉구

제3차 일본군 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폐막일인 1일 낮 12시 서울 종로구 중화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일본·필리핀·대만 대표 60여명과 참석자 등 2백여명이 '수요집회'를 열어 일본의 민간위로금안 철회와 피해자 배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기사 3·23면

임완호 기자

각국 발표 1

왜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는가?

왜 민간모금 구상에 반대하는가

이시가와 이즈코(일본)

우선,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 정부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가해국의 여성으로서 커다란 책임을 느끼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래는 피해자 여러분이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일본여성인 저희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 피해자 여러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도록 활동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1. 일본 정부의 현재 태도

작년 12월 22일, 무라야마 수상은 피해자에 대한 개인보상 등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¹⁾에서 다음의 것을 언명하고 있습니다.

◇ 샌프란시스코 조약, 양국간조약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왔으므로 개인보상을 하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있다.

◇ 종군위안부의 정책이 국제법 위반이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 경찰청에서 관계자료를 성실히 조사했으나 해당자료는 없었다.

국제법률가위원회(ICJ)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일본군에 있고, 일본 정부는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배상을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최종보고서²⁾를 11월 22일에 공표 했습니다만, 그 치밀한 보고를 무라야마 수상은 전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 ICJ는 9월 2일에 초고를 일본 외무성에 보내어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데, 외무성은 이것을 정부 수뇌, 여당의 종군위안부문제 등 소위원회의 위원들에게도 감추고, '받지 않았다' 심지어는 '받았으나 외무성에 만나지도 않고 만든 것'이라고 거짓 발언을 하고, 항의하러 방문한 ICJ 대표에게 오로지 해명과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³⁾ 그러나 그 때부터 1개월 이후 무라야마 수상의 답변은 이전부터의 외무성 답변과 전혀 다름없이 수상으로서의 주체성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12월 27일, 무라야마 수상과 세계여성의 해 연락회(52개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동석했던 이가라시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⁴⁾

◇ 양국사이에서 배상은 해결되었다는 것이 외교상 확인되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을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꾸며낸 방법이 민간모금구상이다.

◇ 95년도 예산안에 민간모금설립을 위한 사무비, 홍보비로써 약 5억 엔을 계상(計上)했다.

◇ 모금 구체화를 위해 일본적십자사에 협력을 요구하여 '찬동인'으로써 紅十字連에도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덜란드 등을 포함해 총리의 편지를 첨부하고 전 '위안부' 한 명 한 명에게 전하고 싶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 개인의 요구에는 협력하고 싶다'⁶⁾고 말하고 있고, 일본외무성도 '상호 간에게 포기한 것은 외교보호권으로서 개인청구권 자체가 국내법적 의미에서 소멸된 것은 아니다'⁶⁾고 답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배상을 하지 않는 것을 상대국의 책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1월 24일 '국제중재재판합의서에 합의하고 상설중재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피해자들의 위임을 받은 변호인단의 제안에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조약 이외 관련조약에서 성실히 대응해 왔다'는 것으로써 제안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튿날, 저희들 '행동네트워크'도 마찬가지로의 요청을 외무성에 하였습니다만, 회답은 같았습니다. 또한 그 때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쿠마라 스와미 UN특별조사관의 보고는 '반드시 새로운 내용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말하거나,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가 취하고 있는 권고에 관해 '명령이나 지시는 아니므로 법률적으로 이것에 따를 의무가 없다'고 말하였으며, UN인권소위원회에서의 반보벤 최종보고서(1993. 9. 2)를 무시하는 등 가해국답지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2. 민간모금구상이 생긴 배경

무라야마 내각은 이미 작년 8월 12일에 민간모금으로 해결하는 방침을 굳혔습니다만⁷⁾ 같은 날에 사쿠라이 환경청 장관이 '일본은 침략전쟁을 하려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아시아는 그 덕에 유럽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독립되었다.'⁸⁾고 하는 망언을 했던 것은 실로 상징적인 사건으로 생각됩니다.

작년만 해도 난징(南京)대학살은 사실무근의 조작된 것이며, '위안부'는 '당시의 공창, 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미군, 영국 군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하는 나가노 법무대신의 망언⁹⁾, '동아시아와 태평양지역에서의 전쟁은 침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어떤지 미묘하다.'고 하는 현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망언¹⁰⁾등이 연속해서 있었습니다. 나가노, 사쿠라이의 각 대신은 경질되었습니다만, 일본유족회 회장으로 있는 하시모토 통산대신의 발언을 무라야마 내각은 문제없음¹¹⁾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침략전쟁을 긍정, 찬미할 목적으로 작년이래 에히메, 시가 등 19현 의회가 전사자에게 '추도'와 '감사'의 뜻을 표명하는 결의를 잇따라 채택하고¹²⁾, 올해 1월 31일에는 자민당 143명의 의원이 '국회사죄결의에 반대하는 모임'을 결성하고 있습니다.¹³⁾ 조선인 여학생이 통학도중

치마저고리를 찢긴 사건도 빈발하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50년 전인 1945년 8월 14일,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고 항복한 이튿날 8월 15일 정오, 昭和천황이 라디오방송에서 국민에게 그것을 알렸습니다만, 그 때 천황은 '이 전쟁은 자위와 아시아의 안정을 성취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다른 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영토를 침범하는 등은 원치 않았다'¹⁴⁾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군 점령아래 처음 열린 의회에서 천황家에서 총리대신이 된 東久彌宮수상은 '終戰'이 천황의 덕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패배한 것에 대해서 전국민이 총참회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¹⁵⁾ 메스컴도 '마침 1억 총참회의 때'라고 이것을 클로уз업하고, 1억 가운데 식민지 지배를 해서 괴로움을 준 대만인 1천만 명, 조선인 2천만 명의 존재가 있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패전이후 불과 3일 후에 내무성은 전국의 지방장관에게 점령군 상대 '위안부' 설치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8월 26일에는 정부와 업계의 공동출자에 의한 '특수위안시설협회'의 결성식이 천황거주 앞마당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당시 정부는 1억 엔을 지출하였습니다. 점령군에 의한 성적 사건이 무장해제되어 귀국하기 시작한 군인들을 자극하고, 천황제를 뒤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지배층의 염려로부터 재빨리 취해진 정책¹⁶⁾이며, 천황제 보호유지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점령군에게 일본여성을 제공하므로써 여성의 인권은 또다시 무시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에의 침략전쟁,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의 잔학한 갖가지 범죄에 관한 무반성, 무자각한 남성들이 전후에도 권력자로서 계속 있다고 하는 특이한 역사를 걸어온 일본은, 연합군의 점령이 끝남과 동시에 아시아의 피해자에게 보상하기는 커녕 침략전쟁을 추진했던 군인에의 연금(恩給)등을 부활시켜¹⁷⁾ 그 액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1995년도 예산¹⁸⁾에서는 일본의 전상병자에 대해서는 1인 평균 551만 4천엔, 전몰자(사망자) 1인 평균 187만 8천 900엔으로 지급액이 인상되었으며 그 외에 연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형제자매 등의 유족 151만 명에 대해서 특별조위금 40만 엔의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전후 처리도 그 국가에 대한 경제협력(실은 일본기업의 이익이 됨)이라고 하는 형태로 종식했고, '나치의 부당함'의 피해자가 된 개개인에의 배상을 골자로(주로)하는 독일과는 대조적인 역사¹⁹⁾를 새겨왔습니다.

일본 국주의가 아시아인의 저항에 의해 패배했다고 하는 인식을 갖지 않고, 아마도 민족 우선의 정신주의에서 '황금만능주의'로, 패전으로부터 변신한 일본인은 국가에의 충성을 회사로의 충성으로 변화시켜 경제대국을 만들었고, 갑자기 생명과 마음보다 돈을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 아시아인의 멸시, 여성멸시, 배금주의는 일본인의 정신에 깊이 스며들어 여성이면서도 '위안부는 전쟁비즈니스의 일환으로써 파생되었다'²⁰⁾한 것이며, '최저한의 치안과 질서를 유지

하기 위한 필요악²¹⁾이었다는 등으로 뻔뻔스럽게 주장하는 가미사카 후유코²²⁾ 등의 평론가가 메스컴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위안부' 문제해결을 둘러싸고는 국가가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은 국가에만 있지 않고 국민에게도 있다고 하여 지금까지 양심적이었던 지식인마저 민간모금 구상실현을 위한 선동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²³⁾

이와 같이 저희의 운동의 미숙함에서 민간모금 구성의 문제점이 아직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 있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3. 왜 민간모금에 반대하는가?

지금까지 설명해 왔던 것처럼 일본 정부에게는 이 문제를 비할 데 없는 성범죄, 전쟁범죄로써 보는 관점이 결여되어 있고, 무라야마 연립내각은 침략전쟁을 긍정하는 세력과 타협하는 가운데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 되기 위하여 넘어야 할 장애물으로써만 보고, 이외의 강제연행피해자와 유족에의 배상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절대로 개인배상은 하지 않는 것이 국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무성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범죄를 범하더라도 배상은 하지 않아도 좋다. 즉, 나쁜 일은 조금 하는 것보다 많이 하는 것이 득이라고 하는 논리가 됩니다.

지금 여기에 한 명의 소녀를 감금하고 윤간했던 남자들이 있고, 처벌도 안 당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끌어 모은 돈을 '사죄의 대신이다.'라고 피해자인 소녀에게 준다고 하면 소녀의 마음의 상처는 얼마나 깊어질까요.

일본 정부는 지금 그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은 국가라고 하는 강대한 권력이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행했던 흉악무도한 범죄이므로 그것을 국민으로부터 끌어 모은 돈으로 끝내려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가해국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온 정책이며, 또 '상대는 가난하기 때문에 어떠한 돈이라도 주면 입다물 것'이라고 하는 피해자에 대한 멸시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아시아 사람을 강제연행하고 노예노동을 강요한 기업에게 있어서는, 사죄와 배상이 아닌 '선의'의 모금으로써 면세초치도 있는 이 구상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1946년부터 47년에 걸쳐서 강제연행된 중국인, 조선인을 사용했던 광산, 건설, 조선 등의 기업은 질이 좋지 않은 노동자를 썼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하고, 또 그들을 송환하는 비용을 썼으므로 일본 정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한 가해기업이 그 때문에 이미 많은 국비를 받고 있고, 지금 얼마 안되는 모금의

돈을 내놓는다면 '범죄는 얼마 안되는 선물로써 얼버무려진다'고 하는 무서운 교훈을 일본국민에게 증언하게 됩니다.²⁴⁾

필요한 것은 잘못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왜 이러한 일을 했는가? 하는 반성으로 시작되는 깊고 진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강대한 가해국이 반성하지 않은 채 변명하고, 피해자가 몸과 마음의 상처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잘못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간모금은 문제를 은폐하고, 아시아와의 진실된 우호를 방해하는 여성과 어린이에 대한 성폭력 용인의 구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시아의 여성들의 협력을 얻고, 일본 정부의 책임을 물으며, 민간모금 구상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된 해결을 위해 싸워 나갈 것입니다.

(주) _____

- 1) 국회의원 의원 吉川春子 군 제출 '중군위안부에 대한 개인배상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각 참질 131 제 13호 내각총리대신 村山富市 94. 12. 22
- 2) "Comfort Women an unfinished ordeal Report of a Mission"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Geneva, Nov. 1994
- 3) 아사히신문 94. 12. 10 'NGO항의에 외무성이 진사' 전국부인신문 94. 12. 20, 'ICJ 외무성에 강하게 항의'
- 4) 여성신문 95. 1. 31 '더욱 여성정책에 힘을'
- 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회의 질문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서간 93. 8. 28
- 6) 91. 8. 27 국회의원 외무위원회에서의 清水登子의원의 질문에 대한 외무성 답변
- 7) 아사히신문 94. 8. 13
- 8) 아사히신문 94. 8. 13
- 9) 아사히신문 94. 5. 5 동 5. 7 '소위 난징대학살, 있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 10) 91. 10. 24 중의원 세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침략전쟁에 관한 질문에 대한 橋本通産相의 정부답변
- 11) 아사히신문 94. 10. 26 무리아마 수상은 '문제없다'
- 12) 滋賀縣의회 결의 제 3호 별지 A
- 13) 회장은 전 國十廳장관, 장관시절, '침략전쟁은 아니었다'고 발언
- 14) 田中伸尙 '다큐멘트 쇼와천황' 동경, 綠風출판

- 15) 田中伸尙 '다큐멘트 쇼와천황' 동경, 綠風출판
- 16) 스즈끼 유우코(鈴木裕子) '종군위안부와 성폭력' 동경, 미래사 1993, 田中伸尙, 앞의 책
- 17) 田中雄. 일본은 전쟁책임에 어떻게 대해 왔는가?, '세계' 1994년 2월호 기타 별지 B
- 18) 1995년도 예산안
- 19) 아사히 신문 95. 1. '독일발 일본 배상과 보상'
- 20) 주간포스트 92년 3월 6일호 '이번은 가미사카 후유코가 박정지(한일여성친선협회장)와 격렬대론
- 21) 앞의 책
- 22) 가미사카 후유코의 소론에 대한 반론은 스즈끼 유우코 '페미니즘과 조선' 도쿄 明石 서점, 1994 참조
- 23) 그룹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 모임, '지금' 제 2호 1994. 10
- 24) 재한피폭자문제시민회의 '지금이야말로 전후처리를!' 제 10호 1991. 2. 28 田中伸尙, 앞의 책

재일교포의 입장에서

왜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반대하는가?

양영지(재일교포)

I. 시작하는 말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구 일본군의 국가적 범죄이고, 전시하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 중대인권침해인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인식에서 일본 정부는 국제인권법, 인도법에 따라서 피해자 개인에게 배상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개인배상도 하지 않고 지원단체들과 당사자들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개인에게 사죄와 보상을 외면하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보고에서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 왜 일본 정부의 최종적 해결책으로 성립되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재일교포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이유를 밝히고자 합니다.

II. 민간기금 결정까지의 경위와 현재

민간기금은 작년 8월 31일, 무라야마 수상담화에서 '국민참가의 길'이라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에 여당 '종군위안부 문제 등 소위원회'의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중간보고에서 이 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소위원회 논의과정에서 첫째, 개인보상은 안한다. 그리고 정부의 출자금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로서 실질보상의 길도 부정당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는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가칭)이라는 '민간기금'의 골격 구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일본적십자사에 본부를 두고 현지 협력단체(한국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하여 민간에서 모금한 돈을 피해당사자에게 지불하기 위한 조직기장을 정비하여 구로야나기 데스크, 히라이와 가이시, 히라야마 이꾸오, 와시오 타꾸야 등 저명인사들을 맡기인으로 4월부터 10월경까지 '민간기금'을 모금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아시아 평화우호기금'(가칭)은 ODA 원조로 한 여성의 존엄을 지키는 각종 사업이 주축이고, 이 계획의 작은 부에 피해당사자에게 돈을 주는 것을 덧붙인 것입니다.

정부출자금은 사무경비, 홍보경비, 인건비 등에 한하고, 정부출자금은 일전이라도 피해자 개

인에게 안가도록 철저히 금전출납의 구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명칭도 '종군위안부'라는 말을 꺼리고 있고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의 역사적 사실에서 어떻게 회피할 수 있을까를 짜낸 대단한 대안입니다.

Ⅲ. '민간기금'을 가능하게 한 요인

1)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할 수 없는 논리'와 관료의 두터운 벽

소위원회는 중간보고서에서 '왜 폭넓은 국민참가의 길을 구하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전쟁에 관한 배상, 재산청구권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로서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미국간의 평화조약, 그 관련조약 등에 따라 국제법상 외교상 성실히 대응해 왔다. 그러기 때문에 도의적 입장에서 국민참가의 길을 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할 수 없는 논리'의 골격은 이 문제는 다른 전후보상문제와 같이 국가간 조약으로 해결된 문제이므로 국제법상 외교상으로도 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또 중간보고서의 문맥에는 나타내지 않았습디만 개인보상을 하게 되면, 강제연행문제에도 파급하여 제한이 없고, 현재 묵과하고 있는 중국정부가 요구를 하기전에 또는 일조국교교섭이 진전되기 전에 이 문제의 결착을 지워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심산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국익우선의 논리와 전후 아시아의 독재정권들과 구축해온 외교체제에 일절 손을 대지 않고 자신들의 결합많은 외교정책을 합리화 하려는 관료의 논리이며 관주도의 정치체제의 두터운 벽을 허물지 못한 운동체의 약함을 통감하는 지난 해 봄 이후의 사항입니다.

2) 한국 정부의 자세후퇴

외교상 안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1993년 8월 4일, 한국 정부는 제 2차 조사결과 발표와 고오노 담화에서 일본 정부가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하였다고 평가하고, 금후 외교문제화 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은 외교문제에서 취하여야 한국 정부가 국가적 신의를 지킨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안한다는 것을 정당화 시키는 방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보상은 필요없으나 진상규명은 철저히 하라'는 김영삼 대통령 발언을 일본의무성은 '한국 정부가 보상은 필요 없다고 하니 못한다' 라고 왜곡하여 개인보상을 안하는 책임을 한국 정부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외무부는 '피해자의 개인보상 요구까지 포함안한다' 라고 표명(93년 3월 18일, 아사히

신문)하고 있으며 정대협에 답신에서도 '정부는 금후 정부차원의 보상,배상은 요구안할 방침이지만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요구 소송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필요에 따라 지원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네트워킹과 재일'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회가 일본 정부의 답변과 한국 정부의 견해 차이를 중시하여 개인보상을 부정안한다는 입장에서 한국 정부의 공식표명을 요청한 경위가 있습니다. 94년 3월, 재일본 한국대사관 교섭에서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일본 서서로가 범죄성을 자각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진상규명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김대통령 발언의 진의는 도덕적으로 높은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이 문제 해결을 재촉한 것이며 이러한 한국 정부입장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는 말할수 없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자세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높은 차원이라도 현실적으로는 일본 정부의 '개인보상 안하는 논리'에 이용당하고 이 논리를 보조하는 결과를 주었습니다.

또 외교문제화 안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관자적 입장은 일본 정부에게 제멋대로 언동할 수 있는 사인을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결국 이 문제의 최대난관인 한국 정부와의 외교절충이 없어진 결과 유엔 인권위원회와 ICJ보고, 권고의 배상요구, 책임자 처벌, 중재재판을 요구하는 운동 등을 무시하고, 관주도 여당내 정치바란스를 고려한 국내조건만으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린 것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었습니다.

IV. 왜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에 반대하는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당사자와 지원단체가 맹렬히 반대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기만에찬 해결책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1) 첫째의 문제점은 국가책임이 불명확한 것, 2) 둘째는 피해자 개개인의 사죄와 보상요구에 해답을 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불가능하며 3) 세번째는 일본국민 총자선사업으로 되어버립니다. 국가뿐만 아니라 누구 한사람의 책임도 밝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방관하면 진상규명, 재발방지, 역사교육 등이 이 사회에서 뿌리박지 못할 위험성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는 송신도할머니를 위시하여 재일동포 입장에서 말하자면 역사인식에 관한 건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정부 각료가 침략전쟁 시정발언을 거듭한 것은 기억에 새롭습니다. 정부각료의 역사왜곡 발언과 동시에 '전후 50년을 즈음하여 전쟁 찬미 결의'가 일본각현 의회에서 채택되고 있으며 금년 1월 31일에는 자민당 국회의원 143명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를 결성하여 부전,사죄결의를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움직임은 일본에 거주하는 송할머니를 위시하여 재

일동포에 대한 차별관을 조장시키는 것입니다. 송신도 할머니는 '민간기금'에 의뢰할 생각은 없다. '위로금'을 받으면 주위의 일본사람들로부터 더욱 멸시당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해국 일본에서 사는 송할머니는 자신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주위사람들의 역사인식도 바뀌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어려워집니다. 당연한 권리로서 '보상금'을 받아야지 자선적 은혜로서 '위로금'을 지급당한다면 현재 받고 있는 생활보호금이 중지될 가능성도 예상되므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은 역사인식의 변혁에 연결되는 문제이며 '보상금'은 피해자의 권리로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봐도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은 역사의 은혜와 왜곡을 적극적으로 조장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질문과 응답

질문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기금 반대를 위해 일본단체들에서는 앞으로 어떤 활동계획을 갖고 계신지?(조성숙, 한국)

응답

우리는 처음에 한국의 여성단체들이 이 문제를 먼저 제기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을 말씀드리면, 대체로 한국 분들을 초청하여 얘기를 듣거나 일본 정부나 일본 국회의원에게 압력을 가한다거나 학습회를 열거나 그 밖에 피해자들이 일본에 왔을 때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피해자들이 국제중재재판에 제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기에 응답하는 형태로 '중재재판을 성공시키고, 개인배상을 실현시키는 회'를 발족했습니다. 또한 내일 발표때 일본 쪽에서 구체적인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앞으로의 움직임으로서는 5월 26 -28일에 걸쳐서 유엔 인권위원회 린다 차베즈 씨라든가 조아네 씨, 반보벤 씨 등을 초청하여 전시 노예제 및 강제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심포지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때에는 여러분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주 큰 집회를 열어서 일본 정부에 큰 압력이 되었으면 합니다.(이시카와 이츠코)

우리여성단체들은 운동하는데 있어서 문제의 여론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여러 작은 모임들을 만들어 강연회 같은 것을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하기도 하고,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이 문제를 국회에서 제기해 달라는 활동도 하고, 서명운동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무성 항의, 재판을 제소하고 있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재일 교포 위안부 송신도 씨 재판지원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지)

한국여성의 질문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알고 있는 것, 저희가 일본에서 해오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다케무라 야스꼬 참의원 등이 참여를 안했는데, 그녀는 사회당의원이면서 여당 전후 50주년 프로젝트팀의 한 명입니다. 전후 50주년 프로젝트팀은 최종적으로 민간위탁기금 구상을 해결책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당의 태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후 제가 다케무라 씨를 만나서 비판하고, 의견을 말했는데, 그녀는 제게 "이 안이 국내에서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케무라 의원 자신도 마음으로 석연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에는 52개 단체 기성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교부인교풍회도 그 연합회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연합회가 1월 12일날 이가라시 관방장관을 만났을 때 52개 단체의 총합된 의견은 아니었지만 민간기금구상은 안된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52개 단체중 어느 단체나 개인도 민간기금의 발기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성들에게 '국제정세는 이렇다. 이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다.' 라며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다카하시 기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

줄리아 포라스

(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조직인 릴라 필리피나(Lila-Philippina)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저는 올해로 66세가 되는 줄리아 파토사포라스입니다. 저의 고향은 필리핀의 남부지역에 있는 도시, 다바오(Davao)입니다. 제 가족은 1982년에 마닐라에 다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제 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석하여 여러분에게 제 2차 세계대전의 생존자의 한 사람으로서, 특히 일본군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강제로 끌려간 것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데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이 다가올 때 다바오에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다바오를 점령했을 당시에 저는 13세였습니다. 그 때 한 어린 소녀로서, 저는 전쟁의 잔인성에 대해, 그리고 일본군이 어떻게 여성들을 강간하고 아이들을 살해했는지 보았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다바오인들이 사람들과 우리 고향 땅을 어떻게 지키려고 했는지도 보았습니다.

1944년 제가 13세였을 때, 우리 집으로 군인들을 실은 1대의 트럭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는 점심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제 여동생은 집 옆에 있는 개울에서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마을에서 43 Km 떨어진 이싱(Ising)이라는 곳의 한 터널로 끌려갔습니다. 터널은 군인들의 방공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어붙었고, 얼이 빠져버렸으며 이 고통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 생각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저는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고통을 이겨 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오로지 얼어붙은 한이 있을 뿐입니다.

저를 처음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리상이라는 장교였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1주일에 서너 번씩 왔습니다. 8개월 동안 제대로 음식, 휴식 그리고 물을 받지도 못한 채 그 터널에 갇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씻을 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얼굴과 비밀스런 곳을 씻을 수 있는 물 한바게스였습니다.

1945년 전쟁이 끝나자 저에게는 찢겨진 삶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50년 이상 그 끔찍한 고통을 안고 침묵하며 살아 왔습니다. 나의 명예는 더럽혀졌지만 살아 남았습니다.

로사 루나 헨슨 (Rosa Luna Henson)이라는 최초의 증언자가 1992년 9월 일본군에게 위안 부로서 강요받은 경험을 증언했을 때 저는 나의 고통스런 과거가 다시 떠올라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나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 용기를 내었습니다.

내 남편은 나의 과거를 밝힐 수 있게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남편은 현재 릴라 필리피나(Lila-Pilipina)로 알려진 필리핀 일본군 '위안부' 대책위원회에 연락을 취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릴라 필리피나로부터 보호를 경험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 나의 친척과 이웃들이 내가 '위안부'라는 것을 알고 나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권과 전 '위안부'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운동에 동참하여 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정의는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저는 집회에 참석해서 부끄러움없이 제 과거를 말합니다. 저는 모임에 나가 다른 피해자들과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물론 울고 또 울고 그 고통에 벗어날 때까지 이 고통을 내던져 버립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보상입니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잔혹한 범죄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제사회에서 일본 정부가 저지른 만행을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위로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민간모금에 의한 것이라면 더더욱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국민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민간모금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한국의 위안부들에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투쟁을 계속해서 이러한 민간기금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위안부문제를 놓고 많은 토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간기금에 대해서는 아직 사람들이 확실하게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 내에서조차도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정의를 원합니다. 나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우리는 일본 정부에게 직접적인 배상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간 위로금 모금 계획은 결코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명예에 대한 훼손과 전쟁이 끝나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고통받아야 했던 이후의 고통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입니다. 일본 정부가 아시아 전쟁 피해자들에게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을 통해서만 정의는 얻어질 수 있습니다.

질 문

줄리아 포라스 씨의 발표 중에 민간모금에 대해서 사람들이 분열되었다고 하는데, 좀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아이코 카터, 일본)

응 답

몇 달 전에 우리신문에 이 자선모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 중에서 한 사람이 필리핀 전 위안부 여성을 인터뷰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만약 그 돈이 4만 불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일본 정부가 지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지불한다면 바로 받을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건강비나 노후의 제정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런 돈을 지불한다고 결정했다니 우리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이것이 일본 정부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기금으로 할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사이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의를 열고 바로 일본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토론을 거친 후 우리사이에서 명백하게 일본 정부가 지불하지 않는 돈이라면 우리는 이 돈을 받지 않을 것이다. 보상은 반드시 일본 정부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이지, 민간기금으로 할당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본 정부로부터 보상을 원하는 것이지 일본국민으로부터 보상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대결속을 통해서 이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긴 투쟁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개인의 직접 보상을 위해서 투쟁을 계속할 것이며 민간기금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직접 연락을 못했지만 우리는 이러한 투쟁을 계속하고 우리의 입장을 일본 정부에게 확실히 밝힐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의 '위로금' 모금 계획에 대하여

넬리아 산초(필라 필리피나 대표)

일본 정부에 개별적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희생자들은 거지가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간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인권을 되찾으려고 싸우는 여성들이다. 그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충심의 정중한 사죄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이 받은 모든 고통과 피해를 보상받아야만 한다.

Lila-Philippina는 민간에서 '기금'을 모으려는 일본 정부의 계획에 반대한다. 그것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희생자 개개인의 직접적 배상의무를 회피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일본 정부이다. 2차대전 전과 그중에 광범한 지역에 위안소를 세우고 일본군인들만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일본제국주의 군대이다. 일본군은 일본군인이 있는 모든 곳에 위안소를 세웠다. 중국,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델란드의 여성들이 이 군위안소에 감금되어 강압적인 상황에서 성적 서비스를 강요 받았다. 군대를 엄격히 통제하고 그 통행과 이동을 통제한 일본이야말로 여성을 매매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이 책임을 현재의 일본 정부는 받아 들여야만 한다. 그 참혹함이 얼마나 광범하게 행해졌는가를 생각하면 정말로 섬뜩해진다. 그 여성들이 견뎌야 했던 위안소의 상황을 생각하면 또한 섬뜩하다. 그것은 생지옥이었던 것이다! 그 여성들은 짧게는 3주일로부터 길게는 십수년을, 매일매일 밤에는 장교에게 낮에는 15, 20 또는 30명의 병사들에게 강간을 당한뒤에, 맞고 고문당한 것이다. 그 상황은 억압적이고 비참했다. 군의가 가끔 건강진단을 했지만, 많은 여자들은 성병에 걸렸다. 전에 몸과 마음이 건강했던 여성들은 위안소에서 병들고 마음은 망가졌다.

일본 정부는 이 일을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성들이 당한 폭력에 대해 명예와 존엄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민간에서 돈을 모아 위로금을 건네주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 여성들의 명예와 존엄은 회복될 수 없다. 정치적, 도덕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이것을 시민에게 돌리지 말고, 정부가 이 여성들에게 지은 전쟁 범죄의 책임을 일정 문서화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전쟁희생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개별적인 배상을 하는 문제는 반세기가 지나도록 해결되고 있지 못하다. 일본과 연합국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문서와 기록들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희생자 면담을 행해야만 한다.

일본은 배상을 일본국적인에게만 실시했다. 일본은 타국적의 희생자들에게도 직접 배상해야만 한다. 일본은 다시는 이러한 전쟁과 군국주의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멸시가 일어나서

는 안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만한다. 그러한 범죄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범한 죄악이 기억되어야만 한다. 일본과 필리핀의 가정과 학교에서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필리핀과 한국의 그리고 자신을 공개한 모든 위안부들은 일본이 행한 강간과 성적 노예화가 전쟁범죄임을 말해야만 한다. 그들은 여성에 대한 범죄에, 인권침해의 범죄에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지지자들, 여성의 인권과 평화와 정의를 옹호하는 우리들은, 전쟁과 갈등상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위해 계속 사회운동과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다.

질문과 응답

질문

민간기금에 대한 반대와 관련하여 먼저, 넬리아 산초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가 제네바에 가 있는 동안에 일본의 변호사 다가끼 변호사가 1,2월중에 필리핀에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듣기에는 일본 내에서 다가끼 변호사와 같은 민간기금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의 운동이 저희들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넬리아 산초에게 질문하는 것은 다가끼 변호사가 가서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네바에서 제가 중국인을 통해 들은 정보는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에서 있었던 남경대학살 57주년 기념행사에 재외 중국인들이 행사를 했는데, 그기에 보상문제를 가지고, 일본인 개인의 관점에 대해서 다가끼 변호사가 참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의견을 얘기했더니 안다. 우리의 입장과는 틀리다. 그러면서 금년 6월에도 전후 50주년 행사를 하는데 또 다가끼 변호사가 온다고 합니다. (신혜수, 한국)

응답

다가끼 변호사 등은 일본 정부의 계획을 우리에게 말해 줬는데, 일본 정부는 위안부들을 위해서 5억 엔을 모금해서 주요 이사들을 받기인으로 해서 일본적십자사를 통해서 필리핀 적십

자사로, 그리고 필리핀 적십자사가 전 위안부여성들을 심사나 인터뷰를 통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약 천만 불, 아직 확실한 모금 액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가끼 변호사와 혹은 여러 다른 변호사들은 이러한 계획을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선금이 보상금의 일부라고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상금이 적절하다면 우리가 지금 제소한 소송을 철회할 의사도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 계획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왜냐하면 위안부 여성들이 이 안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결국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안부 여성들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돈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정부의 계획이 물론 좋은 제안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러한 제안을 발전시켜 나가서 우리가 소송을 철회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안부 여성이 보상을 받게 하지는 것입니다. 만일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이 자선금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일부 여성들은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찬성한 사람도 있었지만 하지만 또 다른 의견도 많습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들은 특히 소송을 철회하는데는 극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민간기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일종의 일본군'위안부'들의 반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릴라의 회원들도 여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지원단체나 변호사들과 연대해서 민간기금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북한발제 요약,정리문 왜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가?

홍 선 옥

(중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각국 대표여러분

나는 먼저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여 준데 대하여 토론회 주최측에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녘의 여성들에게 보내는 북녘 여성들의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는 공동된 지향과 염원을 안고,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 대표들을 우리 대표단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 3차 연대회의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우리 조선이 일제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것이기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우리 민족이 커다란 감격과 기쁨 속에 맞이한 역사의 날 8.15는 우리 민족이 41년 동안이나 강요된 식민지 명예를 벗어 던진 해방의 날인 동시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갈라진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해방 50돌이 되는 1995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 앞에는 분열의 비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할 민족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에 의한 조선인 600만 강제연행문제, 100만 학살문제, 36만의 군인,군속들에 대한 보상문제, 특히 조선여성들에게 강요한 천인공노할 만행 등 전쟁시 죄행을 총결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이전 일본군'위안부'들과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지난날에 당한 치욕의 한을 풀지 못하고 일제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저주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결산을 똑바로 하는 것은 일제의 과거를 청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가 감행한 일본군'위안부' 범죄사건은 당시 일본 정부가 군부와 결탁하여 국가정책으로 실시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행위이며 민족말살책동이었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범죄사건의 엄중성은 중세기적인 야만성과 현대적 교활성을 결합하여 약소민족의 존엄과 명예, 여성들의 정조와 생명을 잔악하게 침해하고 유린함으로

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한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오늘까지 지난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국가적 보상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행위이며 역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범죄사실의 진상을 은폐하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최근에 민간기금안이란 것을 들고 나와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그 어떤 감언이설로 민간기금안을 합리화하려 해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민간기금안' 이라는 것이 일본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적 보상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은 대체로 두 가지 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일본 정부가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차 대전이후 국가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이미 보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조리 감추어 두고, 이 사건에 일본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일본 정부당국의 철면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 정부는 자기들의 전쟁시 죄행을 청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들 대부분이 살해되었고, 피해 생존자들이 여성으로서 자기의 과거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이 사실자체를 영원한 흑막 속에 묻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방위청 문서고에서 위안소에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문서가 발견된 다음에야 마지못해 황군의 관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전시조건에서 20여만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 를 강제연행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은 특대형 조직범죄는 당국의 관여없이 감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이전 일본의 관리들이 일본 정부당국의 지령 밑에 이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 어떤 술책으로서도 일본군 '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국가적 보상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생역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되는 국제법률가협회는 얼마 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떠한 협정도 일본 정부에 대한 개인보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개인보상을 거부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범죄는 과거 일본국가가 저지른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현 일본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 정부는 민간기금안을 성사시킴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 책임에서 벗어나고, 보상문제를 민간인들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 정부가 추진시키는 민간기금안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과거 죄행을 벗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 정부가 저지른 전시 죄행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일본국민들에게 추가부담을 들 썩우게 될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자기가 저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 정부 당국의 민간기금안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철저히 저지,파탄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간기금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만행을 묵인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일본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도록 조장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류역사 앞에 그토록 엄중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요하게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저들의 과거 죄행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극력 합리화해 나서는 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를 다시 감행하려는 기도를 품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미화하고 정당화해 나서는 것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일부 지방의회들에서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침략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하고 침략전쟁마당에 내몰려 죽은 전몰자들을 조국의 안녕과 고향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이라고 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세력이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찬양하는 것은 곧 그러한 범죄행위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것으로밖에 달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정부와 되살아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이전 군국주의자들이 걸었던 범죄의 길, 침략전쟁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당국이 들고 나오는 민간기금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일본군국주의 침략야망에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고안해 낸 민간기금안의 교활성을 똑바로 가려보고 그를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민간기금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렁이고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몇 푼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들의 짓밟힌 존엄과 잃어버린 청춘, 그들의 가슴속에 남긴 뼈아픈 상처는 그 무엇으로서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들이 한결같이 일본 정부가 물질적 피해보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일본 정부당국이 과거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똑똑히 사죄를 한 데 기초하여 응분의 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위문금이요 뭐요 하고 잔피를 부리며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2중의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 당국은 일본의 과거 죄행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응당 자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데서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50돌이 되는 올해는 일본이 국제사회 앞에 자기의 성실성과 양심을 검증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 정부가 과거 죄행도 청산하지 않고 유엔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어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앓을 자리도 설자리도 가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처신을 바로 해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난 날의 죄행에 대한 진상부터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민간 기금안 이라는 것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저지른 죄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똑똑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실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교훈을 찾으려 하기 위하여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행위를 역사교과서에 사실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후대들을 옳게 교육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본 정부가 죄악에 찬 과거를 성실히 반성하고 청산하며 역사의 오류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아시아 민중들과 함께 진정한 친선과 평화의 길을 걸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북과 남의 전체여성들의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우리 북·남여성들과 아시아여성들이 일본의 과거 죄행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왜 민간기금을 반대하는가?

김 순 덕

(한국 전 일본군'위안부')

여러 나라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여러 단체에서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2차 대전때 잘못된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뿐만 아니라 다른 피해자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본은 과거에 일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부가 잘못해 놓고, 국민에게 그 잘못을 떠 넘기고, 모금을 해서 할머니들한테 위로금을 준다고 합니다. 할머니들은 일본국민한테 위로금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정부에서도 위로금을 받고 있고, 여러 여성단체들로 부터도 몸으로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모금으로 모은 몇 푼씩의 위로금으로, 그 크나큰 죄를 씻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들은 우리 명예 회복을 할려고 위로금을 받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으면서도 왜 위로금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서 우리를 다시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들을 나이 14.5세에 그렇게 무지막지한 사람답지 못한 짓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서 지금에 와서도 잘못된 일이 없다고 하니 이 할머니들은 분할 따름입니다. 약한 나라라고 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강하다고 해서 강제로 우겨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 위안부 범죄에 대해서 우리 할머니들은 쉽게 위로금을 받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위로금을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이가 많아서 살아 있을 때 사죄 받지 못하고, 배상받지 못하고 죽는다 해도 우리 후세의 젊은 분들이 절대적으로 그 잘못을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꼭 밝히고 말 것입니다.

대중에는 지나간 일을 가지고 뭘 그렇게 시끄럽게 그러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일만 생각하면 밤새도록 잠도 못자고, 부들부들 떨리고 그러니다.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 있는데 어떻게 지나간 일입니까? 지금 50년이란 세월이 지나가도록 말 한마디 열지 않고, 자기 부모 형제간에도 말 못하고 있는 그 심정,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에 와서 죽기를 다짐하고 가까스로 일본군의 만행을 폭로한 지도 벌써 몇년이 흘렀습니

다. 아직까지도 해결을 짓지 못하고 이려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나 한심스럽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받들고 거들고 그래도 약하니까 이제는 온국민이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나라없는 백성이라 해서 그때는 그렇게 당했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만만히 보지는 못할 나라인데 일본에서는 아직도 어수룩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나라를 업신 여기고 무엇이든지 우리정부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일본이 한 일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민족을 군인, 군속, 징병, 보급대 등의 이름을 붙여서 사할린, 연변 등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갈기갈기 나눠놓았습니다. 그러한 큰 죄를 우리에게 위로금을 주고, 적당히 해결하여 죄를 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민간위로금을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잘 살아 왔습니다. 앞으로 위로금을 받고 불명예스럽게 죽는 것보다는 위로금을 받지 않고 명예롭게 죽는 길을 택할 것입니다.

얼마전에 일본에 지진이 난 것을 한국사람들이 불을 질렀다는 망언을 해서 우리들을 이렇게 또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모두 과거의 죄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은 진심으로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시죄하고, 배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본도 살고, 우리도 바로 살 수 있는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김 경 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금년 1995년은 태평양 전쟁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일제 침략기간중 일본군에 의해 침해된 개인의 권리가 회복되고 피해자들만이 아니라 아시아인들 전체가 참된 의미의 기쁨을 향유하는 해가 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더구나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국제사회에서도 큰 관심의 대상이 되어 있고, 유엔 산하 기구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는 이 시점에서 제 3차 아시아연대회의를 열어 함께 전후 50년 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지난 2월 초 무라야마 내각은 전후처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가칭) 구상의 명칭은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 기금'으로 하고, 10억엔 정도를 국민모금으로 조달하는 한편, 정부는 홍보,사무비 등으로 5억 엔을 보조한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100명 전 군대위안부를 일시금 지급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며 지급액은 일인당 100만엔 이하로 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정부주도의 민간위로금안에 대하여 이미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고, 지금도 절대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이 위로금 안을 철회해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관련국과 피해자들의 신뢰회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무라야마 일본총리가 발표한 전후보상안은 적어도 피해 당사자인 한국과 아시아의 주변국인들이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을 만큼 이행되어야 한다. 보상의 의미를 넘어서 배상의 태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배상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얼마만큼 진실하고 성실하게 과거를 뉘우치고 피해자에게 속죄하는가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러한 태도가 결여되었을 때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더라도 신뢰를 회복하기는 어렵다. 신뢰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이 그렇게 원하는 거부권을 갖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아시아에서는 지지를 얻지 못한 것도 왜 일본이 불신을 당하는지 알아야 한다. 진실된 과거에 대한 사죄가 신뢰회복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언제 돌아 가실지 모르는 피해자에게 민간모금으로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것은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인다고 생각하겠지만, 더구나 일본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여 그 명분을

세우기까지 한다는 것은 과거 책임을 덮어 둔 눈가림으로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그리고 진실된 사죄는 국회결의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수상들이 공식석상이나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과거 전쟁에 대한 사죄를 표명했지만 개인의 사죄는 내각의 자료들에 의해서 도전받거나, 부인당하여 왔다. 그러므로 사죄는 일본국회의 결의를 통해 일본전체의 사죄로 표현되어야 한다.

2. 일본군‘위안부’ 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야만적 행위는 국제법상 비인도적 범죄이며 전쟁범죄이다. 이 범죄는 시효가 없으며, 조약으로 면책시킨 바도 없으므로 일본 정부는 현재도 관련자를 처벌할 의무가 있다. 이 범죄는 부녀매매금지조약과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ILO) 제 29호 조약 “육전의 범 및 관습에 관한 협약” “노예제를 금지시키는 국제관습법규”에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국제법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설사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할지라도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현재까지 인권침해 배상 책임과 전쟁범죄와 비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여 온 것에 대한 “불처벌의 책임”도 져야 한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를 통한 해결방법도 일본 정부가 피하는 마당에 전후 50년이 되도록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들을 방치하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피해자가 계속적으로 당해온 신체적, 인격적,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감안하여 개인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국제법률가협회는 94년 11월 22일 권고문을 내어 위안부에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일본은 아직도 진실을 파헤치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었다. 도대체 이 제도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계획되고 수행되었는지 명령의 책임소재가 어디인지 강제연행소녀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밝히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다. 응당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준다니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공식적으로 묵인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범죄성에 대해 민간인 스스로가 이제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이제 끝이 났다는 식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오히려 아시아 피해국에 당사자들은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진상규명과 법적 책임을 다함으로써 올바른 역사를 정립해 가도록 촉구해야 한다.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고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할머니들은 역사의 피해자들이며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 있는 역사이다. 그들이 겪었던 고통은 어떤 돈으로 위로를 할 수는 없다. 50년 전 일본군에 의해 짓이겨진 인권과 명예는 일본 정부로부터 당당하게 사죄와 배상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일본의 범죄적 성격은 가리어지고, 민사적인 성격, 돈의 문제로 왜곡되어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옹당 책임져야 할 국제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민간인에게 그 책임의 일부를 전가하여 위로금을 전달하여 준다는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오히려 선행을 베푸는 것처럼 가해자를 미화시키고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시키는 처사인 것이다. 전쟁 중에 일어난 조직적인 강간에 대한 비난은 받아 마땅하고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피해자들의 호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일본대사관 앞에는 벌써 150여 회째 역사의 진실을 촉구하는 외로운 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로금은 너희 일본거지에게나 줘라. 먼저 용서를 빌라. 너희의 사죄야말로 우리의 명예가 회복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법적으로 정당하게 배상하라.” 할머니들은 오늘도 절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할머니 증언 집회후 어느 일본여성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지금 내 딸들이 지금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면’ 하면서 미안하다고 울먹였다. 그런데 일본뿐 아니라 중국이나 미국 세계 다른 나라에도 배상금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으면서 싱가포르에 사는 내 친구의 말이 한국 아버지들은 돈 받고 딸을 많이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중국의 조공녀, 미국의 양생시, 오늘날 기생관광도 같은 문제로 보는 것은 일본사람의 시각에서 본 한계이다. 세계인류 역사상 어느 나라 임금이 기획하고, 입안하여 군대,경찰 통제하에 점령지 13-18세의 소녀들을 20만 명이나 몰았다고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가하면서 성노예를 삼다가 전쟁에 지고 떠날 때는 어린 여성들을 유기, 살상하고 기록을 없애서 역사 속에서 폐기처분했습니까?]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민간위로금으로는 절대로 은폐할 수 없는 역사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다. 일본이 아시아에서 진정한 이웃으로 평화를 공유하고 살자면 진실된 사죄와 배상으로 신뢰를 구축하고, 국제법 질서에 대응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 즉, 일본 정부가 민간모금 위로금 안을 철회하고, 개인에게 법적으로 사죄하고 배상하며 후세에게 진실된 역사를 가르치도록 아시아에 있는 피해자 당사국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국제적 연대를 더욱 끈고히 하자. 진실이 승리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치자.

타이완의 일본군 '위안부'들은 정의를 원한다.

Yu-Fang Shiau

I. 우리는 "위로금"을 반대한다.

우리는 '민간기금'과 '위로금'의 계획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또한 일본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일본군'위안부'들에게 사과를 하긴 했지만, 그것이 진실한 뉘우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이 계획이 일본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전범국'이라는 낙인을 피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민간기금'을 이용함으로써 일본 정부는 일본이 이 범죄에 가담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정부가 2차 대전 중에 아시아-태평양지역 전역에 대규모 성노예 제도를 설립하고, 운영했던 것이다. 이 전범국이 희생자들에게 배상을 하지 않고,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대신에 일본은 살아있는 희생자들에게 자비로운 도움을 준다는 의미로 적은 양의 '위로금'을 주려고 하고 있다.

희생자들이 바라는 것은 일본 정부에게 정의와 존엄을 되돌려 받는 것이다. 그들은 일본 정부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다.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위로금'을 절대로 받지 않을 것이다.

II. 왜 우리는 '위로금'을 반대하는가?

일본군'위안부' 강제동원은 일본 정부가 행한 체계적인 범죄이다. 그 범죄의 성격은 강제성 노예화와 체계적 강간이다. 그것은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전쟁범죄 및 어린이와 여성의 매매금지법의 위반이다. 이 여성들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모욕당하고, 전쟁에서 죽기도 했다. 그들의 삶은 이 모욕이 있는 후 전적으로 달라졌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법에 따라 자신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 이 여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이 여성들에게 범죄의 심각함과 성격에 따라 정당한 배상을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올바르게 해결될 수 없다.

정당한 배상은 이 여성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돈은 민간기금에서가 아니라, 정부로부터 나와야 한다. 배상은 어떤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책임이다. 이 여성

들에 대한 배상은 물질적인 배상과 정신적인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배상의 액수는 범죄의 성격과 파괴력에 맞게 충분히 높아야 한다. 타이완 일본군'위안부'들은 적어도 2000만 엔을 넘는 배상액수를 요구해 왔다.

'위로금'과 '민간기금'의 계획은 절대로 정당한 배상이 아니다. 늙고 병든 이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정의란 적어도 존엄의 회복, 일본 정부로부터의 공식적 사과, 이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리고 이 여성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포함해야 한다. 오랫동안 수 차례에 걸쳐서 여러 피해 국의 여성들은 그들의 요구를 명백히 해 왔다.

'민간기금'안에서 일본 정부는 그들이 2차 대전 중 일본에 의해 징집된 군인들에게 배상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전쟁 중에 죽거나 부상당한 타이완의 군인들에게, 그 돈의 액수는 부적절한 것이었지만, 한 사람당 20만 엔씩 배상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일본군'위안부'들의 인권은 어디로 갔는가?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들에 대한 차별과 부정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정의를 원한다"고 타이완의 일본군'위안부'들은 요구한다.

각국 발표 2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한발제 요약 정리문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최 금 춘

(종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대표 여러분!

구 일본군에 의한 일본군 '위안부' 만행사실이 우리 민족과 아시아 민중들의 커다란 관심사로 된 때로부터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고, 우리 북과 남의 여성대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 여성 대표들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한 때로부터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와 토론회들에 여러 번 참가한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조국해방 50돌이자 곧 일제의 패망 50년이 되는 해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소집된 데 대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의에 참가하는 회수가 늘어갈수록 이미 오래 전에 해결되었어야 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거듭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는데 대하여 안타까움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을 가로막고 있는 일본당국과 그에 추종하는 일부 세력들에 대한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인류역사의 갈피마다 에는 크고 작은 전쟁 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때마다 침략자들에 의하여 감행된 반인륜적 범죄사실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지만, 구 일본군이 20여 만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들을 상대로 감행한 그러한 범죄행위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여 일제에 의하여 감행된 일본군 '위안부' 만행은 그 범죄의 성격과 가혹성, 기간과 규모, 그것이 미친 효과로 볼 때 보통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도 끔찍한 전대미문의 만고 대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2차 세계대전시기 대국들에 의하여 감행된 범죄행위들이 거의가 청산된 오늘에 와서까지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 '위안부' 범죄가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극히 비정상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소집되고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안을 왜 반대하는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기본의제로 삼고 토론회하는 것은 매우 의의있고 시기적절한 것으로 된다고 인정하면서 본 토론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금년 안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조선민족과 아시아 여러 나라 민중들과 여성의 존엄을 되찾고 회복하는 문제이며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의 가슴에 서려있는 피맺힌 한을 풀어주는 문제입니다.

금년은 일제가 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국제사회는 올해를 인류사의 한 시기를 총화하고 새 출발하는 해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30년대, 40년대 일제에 의하여 저질러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이 해를 넘기지 말고 공정하게 해결되어야 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공정하게 원칙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대들이 다시는 그러한 비극적인 수난자로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한 책임적인 문제입니다. 과거에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하여 똑똑히 결산하는 것은 치욕의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게 하며 정의의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더우기 일부 세력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의 책임을 회피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는 조건에서 그 청산을 바로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범죄보다 더한 범죄를 새롭게 추동하는 것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일본군‘위안부’로 끌려갔던 생존자들의 처지로 볼 때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여기에서 어떠한 양보나 주저도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은 70-80 고령으로서 인생말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며 더구나 청춘시절에 일제에게 당한 학대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미 폐인이 되었거나 문전출입이나 겨우 하는 장기적인 병약자들입니다. 그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합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반드시 피해당사자이며 역사의 증견자인 그들이 살아있을 때 똑바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과 아시아 여러 나라 민중들의 공통된 지향이며 확고한 의지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코 저절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백일하에 드러난 역사적 사실까지 전면 부정하면서 철면피하게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일본당국에 스스로 올바른 과거청산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 조선민족과 아시아 나라 민중들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데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우리는 인정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을 어떻게 벌려 나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제의 과거 죄행을 계속 전면적으로 폭로, 단죄하며 피해를 당한 아시아의 모든 나라 여성들과 민중들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에 더욱 적극적으로 떨쳐나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몇몇 ‘위안부’ 생존자나 그 유가족들 또는 어떤 특정한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나라와 아시아 여러 나라의 이익과 존엄과 관련되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 나라의 북과 남, 그리고 아시아 나라 민중들 속에는 자기가 당한 수치와 모멸감 때문에 피눈물나는 과거를 숨기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시기 일본 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 연행과 '위안소' 관리에 참가하고서도 자기의 땀땀치 못한 과거를 세상 천지에 밝히지 못하는 일본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범죄 행위의 진상을 계속 파헤치고 역사의 심판에 제소하는 활동을 더 과감하게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과거를 숨기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들이 대담하게 일제의 과거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도록 하고 모든 나라 민중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의 투쟁에 대중적으로 참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와 아시아 나라 민중들과 여성들이 전시 죄행을 회피하며 합리화하려는 일본 반동들의 부당한 제동을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려나가는 것입니다.

전시예 식민지 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연행, 납치하여 일본군 '위안부'로 전락시키는 것을 국가 정책으로 고안해 낸 당사자도, 또 이런 비인도적인 민족말살 행위를 직접 집행한 자들도 다름 아닌 일본 침략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범한 범죄 행위의 전모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일본 당국은 지금 이 시각에도 그것을 역사와 인류 앞에 스스로 자백하고 공정한 심판을 받을 대신 온갖 술책을 다하여 그 책임을 모면해 보려고 꾀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과 각 계층 민중들은 일본 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하여 성실히 사죄하며 보장하지 않고서는 더는 배겨내지 못하도록 사면판방에서 압력을 가하는 활동을 강화하여야 합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는 자기 나라가 처한 환경과 조건에 맞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항의 요청 투쟁, 서명 운동 등 여러 가지 투쟁을 벌리는 한편 일제의 전시 만행을 폭로하는 영화감상회, 사진 전시회, 출판물 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끊임없이 조직,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전 일본군 '위안부'들과 그 관계자들을 일본 정부 당국에 보내어 담판 투쟁, 항의 농성 투쟁을 벌리는 것은 일본에 커다란 압력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엔과 그 산하 기구를 비롯하여 국제기구들에 일제의 과거 죄행을 제소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일본 당국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나가기도록 하는 사업도 계속 활발히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하여 모든 유관국들이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민간기금안'의 기만성을 폭로 배격하고 그것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가는 데 힘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공정하고도 철저한 해결을 위하여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단호히 저지 파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 당국은 아시아 나라들과 체결한 쌍무협정에 의하여 이 나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미 해결되었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장애하는 이러한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진심으로 민족을 귀중히 여기는 북과 남의 각 계층 민중들이 일치단결하여 일제의 과거 죄행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북과 남의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단체들이, 나아가서 아시아 여성들과 단체들이 연대 투쟁을 더욱 강화하는 것입니다. 투쟁의 위력은 단결에 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과 여성 단체들, 각계각층 민중들이 과거 청산 투쟁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 세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하나의 공동 투쟁으로 지향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일본 정부 당국이 지난 날의 범죄 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며 충분한 보상을 하게 만드는 효과적인 방도로 됩니다.

우리는 아시아 나라 여성들과 민중들의 투쟁을 공통된 하나의 목표로 지향시키고 그 투쟁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하여 공동의 투쟁 조직을 발족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 투쟁 조직을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 연대 위원회'라고 명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연대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련있는 모든 나라의 관련 조직 대표들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에 관심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 대표 여러분들이 우리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나서리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토론된 바와 같이 일제의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옹기 해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앞 길에는 여전히 커다란 난관과 장애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투쟁은 정당하고 정의로운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며 머지 않아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해결되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이번 '제 3차 일본군'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가 조선 해방 50돌이 되는 올해 안에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도록 응당한 기여를 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바라면서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조직하다.

넬리아 산초
(필리핀 LILA-PILIPINA 대표)

I. 배경

LILA-PILIPINA는 "Liga ng mga Lalang Pilipina"를 지지한다. Lila-Pilipina는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와 강간당한 후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의 일본군 '위안부'들의 인권과 정의 및 배상요구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조직이다. 이것은 일본군 '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싸움을 지지하는, 필리핀에 있는 여러 조직들과 네트워크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있다.

1992년 7월 13일, Task Force On Filipino Comfort Women이 일본군 '위안부'들의 정의를 위한 운동을 지지하는 전국적 조직으로 출발했다. TFCW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기획하고,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모이는 위원들로 구성된 의회의 기능을 했다. 구성 단체는 7에서 15단체로 늘어났다. 전국의 사무국은 AWHRC와 Rayan Women's Desk로 구성되어 매일의 운동요구를 조정했다. 2년간 AWHRC는 일본군 '위안부'들과 지원 활동 자들의 보고와 요구를 받는 회의장을 제공했다.

1994년 5월 16일, TFCW 구성원들과 전 일본군 '위안부'들은 Lila-Pilipina를 조직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직은 전쟁과 갈등상황에서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필리핀의 전 일본군 '위안부'들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그것은 희생자 자신들이 소송을 한 첫 케이스이다. 그것은 전쟁범죄와 인권침해범죄에 관한 1907년의 헤이그 조약의 법적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II. LILA-PILIPINA와 TFCW의 활동

1992년 10월 29일, 일본 변호사들이 일본군 '위안부'들을 면담하는 등 사실규명작업을 벌였다.

1993년 4월, LILA-PILIPINA는 동경의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1994년 7월 31일, LILA-PILIPINA는 일본변호사들의 제 7차 사실규명작업에 힘입어 항의집회와 총회를 했다. 여기서 단합을 위한 춤과 건강수첩 및 의료카드의 배부가 있었다.

1994년 5월 13-16일, LILA-PILIPINA는 기획과 토의를 위한 전국집회를 열었다.

1994년 6월 3일, LILA-PILIPINA 멤버들은 동경지방법원에서 열린 제 4차 필리핀 일본군'위안부' 재판에 참석했다. 6월 6일에는 한국의 일본군'위안부'들과 일본의 지지단체 및 개인들과 함께 700여명이 행진을 했다.

1994년 6월 25일, LILA-PILIPINA는 총회와 LOLA의 생일축하연이 열렸다. 많은 축하와 발표가 있었다.

1994년 7월 8일, LILA-PILIPINA는 러미지 쉼일을 벌였고 이후 몇 번 더 열었다.

LILA-PILIPINA는 또한 UN등의 국제기관에 활발하게 성명서를 내고 있다. LILA는 1994년 9월 13일에 일본의 UN상임이사국 취임반대성명에 참가했다. 1994년 7월 18일, LILA는 무라야마 일본총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담은 편지를 보냈다.

1) 아시아 센터 설립계획을 철회하라.

2) 희생자 개개인에게 중심의 사과를 하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전쟁희생자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라.

LILA-PILIPINA는 1994년 3월 12일에 동경에서 열린 '여성의 인권에 관한 아시아 법정'에 활발하게 참여했다. 법정이 진행되는 동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강간, 고문, 구금, 강제이동 및 유괴라는 끔찍한 범죄를 비난하는 성명이 나왔다. 이 성명은 일본의 '일본군'위안부' 정책'을 전쟁범죄라고 규정하고 이것과 모든 다른 군대의 성적 노예화를 비판했다. 이 성명은 인도의 Devadasi제도, 일본의 성노동자 등의 여성의 매매 외에, 오락과 매춘을 위한 여성노동의 대대적인 수출을 지속시키는 성 산업으로 인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동경법정은 또한 다음과 같은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자료수집, 교육/홍보, 로비활동, 희생자 지원.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다음과 같은 제안이 나왔다. ; 철저한 조사와 자료수집, 전범의 재판과 처벌, 희생자에 대한 배상, 공공교육, 국제적 연대의 강화.

1995년 2월, LILA-PILIPINA는 LOLAS의 정의와 배상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필리핀 국가신문에 유료광고를 냈다. 제목은 "우리는 거지가 아니다.: 위로금은 싫다. 배상하라"였다. 이 광고는 일본 정부가 희생자 개개인에게 배상과 사과를 하지 않은 채,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이 문제를 종결지으려는데 대해 LOLAS의 반대를 나타냈다. 이 광고는 이 이슈를 보다 널리 알리고 LOLAS의 요구에 강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목적이 있다.

III.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우리의 운동이 시작한 이래, 우리 LILA-PILIPINA는 국제법률가협회(ICJ), 평화와 자유를 위한 국제여성연맹 등의 세계인권단체와 많은 아시아여성단체들의 지지를 받아왔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그 극악한 범죄에 희생된 여성들에게 수치와 불명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상처를 가져왔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본군'위안부'들이 고문과 인간적 모욕의 조건하에서 성적 노동을 제공하면서 매일 강간을 당했다는 것을 안다. 50년간 일본은 이 사실을 숨기려 했다. 50년간 희생자들은 아무 지지자들도 없이 그들의 상처를 품은 채 침묵 속에 살아왔다. 그들은 오늘날까지 이 폭력적인 기억과 함께 살고 있다. 그 고통은 아직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정부와 그 사회가 보이지 않게 만든 폭력인 것이다.

우리의 희망은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우리의 운동을 추구하는 것이고 일본의 법정과 UN을 이용해서 배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이 여성들을 강제동원했고, 이 잔악한 제도를 유지시켰다는 것을 시인하도록 그리고 그 범죄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하도록 계속 압력을 넣어야만 한다.

우리가 일본의 법정에 소송하는 것은 금전적인 배상을 받으려는 것 뿐 아니라, 세계사회가 이 성 노예화를 전쟁범죄임을 알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은 이 범죄의 희생자들에게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다.

1995년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 4차 세계여성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 활동이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우리는 여성단체들을 초대하여 우리가 계획하는 워킹과 프로젝트에 참가 시키려고 한다.

아시아 전체에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이다. 우리의 목소리는 희망과 투쟁의 목소리이다. 우리의 눈은, 객관화와 복종에 기초한 지배의 현 상황과는 다른, 세계를 파악하는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의 눈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고통이었던 세계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재일 동포 입장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김영희(재일 교포)

일본 정부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을 착착 추진하고 있는 현재 '기금'의 가동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죄와 국가보상을 이루기 위한 힘을 어떻게 축적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제안도 겸해서 보고하고자 합니다.

1. '민간기금'을 가동시키지 않기 위하여

벌써 결정은 했다고는 하나,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으로 '위안부'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살얼음을 밟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금'에 돈이 모일지, 피해자들이 받을지, 또 현재 침묵하고 있는 한국 정부가 어떤 형태로 요구를 덧붙여 올지도 모르는 등, 많은 불안거리를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러한 일본 정부의 약점을 찌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현재 재일 한국인 송신도 씨를 비롯하여 한국이나 필리핀의 많은 피해자들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치에 맞는 돈이 아니면 의미없다'(송신도 씨) '민간으로부터 모은 동정의 돈은 필요없다. 일본 정부가 제대로 사죄하고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이순덕 씨)등, 피해자들의 국가보상요구의 목소리를 널리 알리며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간기금' 진척상황으로 보면, 4월부터 반년간 정도 돈을 모으고 가을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할 것이 예상됩니다. '지금을 받느냐 마느냐'라는 식의 양자택일의 제한적이고 왜곡된 선택을 피해자에게 직접 떠맡기지 않기 위해서도 현단계에서 다각적으로 접근하고 '기금'의 가동을 막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금'의 발기인 후보자들에게 '기금'의 기만성을 호소하고 '발기인이 되지 말라'고 압력을 가하거나 (일본의 지원단체는 공개질문서 송부를 계획중) 기부금이 모이지 않도록 기업이나 노동조합에 파상공격을 가하는 것들입니다.

뒤에 구체적으로 서술하겠지만, 침묵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II. 사죄와 보상의 실현을 쟁취하기 위하여

어제 보고에서도 있었듯이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은 단혀진 일본국내의 조건만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쟁범죄라는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책임도 방기하고 은혜로서의 '위로금'에 의한 결착은 일본국내에서는 통한다 해도 개인보상을 실시해 온 독일이나 미국, 캐나다의 전례를 상식으로 삼는 국제사회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로 하여금 결정을 수정시키기 위해서는 외교적 압력이나 국제적 압력을 가함으로써 국내 '사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운동, '북경여성회의'나 그 전 단계의 '여성 지위위원회'에서의 로비활동, 또는 UN인권소위원회에서의 활동, 중재합의를 촉구하는 활동이나 ICJ권고를 널리 알리는 운동 등, 배상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담보로 일본 정부에게 국제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작년 한해동안의 우여곡절을 겪어 분명히 드러난 것은, 전후보상실현을 약속한 무라야마 사회당 위원장이 수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개인보상이 후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회당 정권에 대해 환상은 가질 수 없다는 것, 또 외무관료의 논리와 벽이 그보다 더 높다는 것을 통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관이 주도하는 역관계를 논리상으로도 무너뜨리고,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정부 내에서 부상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국간 조약으로 해결되었다' '한도가 없어진다' '해당하는 국내법이 없으니 대응할 수 없다' 등 관료논리를 정면으로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필요하며, 그를 위해 보상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도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중요성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으며, 이미 다양한 운동이 시작되어 있을 줄 압니다. 여기서는 특히 재일 동포 입장에서 보이는 점으로서, 한국 정부를 움직이는 운동의 의의와 그 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I. 한국 정부에 대한 운동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는 '위안부'문제를 비롯하여 전후보상문제는 모두 양국간 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답변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일' 피해자에 관해서는 양 정부간에서 견해가 어긋납니다. 高陳石一, 石成基 씨 등 '재일' 전쟁부상자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하여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일 한국인 전쟁부상자의 보상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의 해결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재일 한국인 전쟁부상자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원호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1994년 1월 26일, 한국의무부의 답신),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놓고 양 정부간에서 사실상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구권협정 3

조에서는 협정해석에 있어서 이의가 생겼을 경우의 중재방식도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한국 정부의 의지 여하에 따라서는 이 점을 문제화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위안부'문제에 대해서는 청구권 협정이 체결 시에 문제로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니다. 최근 대한변협은 한국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해 '한일협정의 내용에는 개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문제는 포함되지 않았고, 전쟁범죄와 같은 형사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국간 조약으로 해결되었다'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일본 정부가 조일국교 회복교섭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한일조약'에 있는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할 필요가 생길 것입니다. 즉, 현재도 장래에도 한일조약 및 '한일청구권협정'은 문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뿌리가 흔들리면 일본 정부의 '해결되었다'는 주장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이라는 결착을 외교상 문제가 생기면 수정할지도 모른다고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게는 '말없는 한국 정부'의 존재는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합의라도 본듯한 발언을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행동네트워크가 일본의무성 교섭을 했을 때 외무성측은 '우리 나라에서는 조약에 따라 성실하게 처리해 왔다.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사이에는 이의는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의 답변만을 들으면 마치 한국 정부가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에 동의하는 사인을 보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오해를 풀지 않고 계속 침묵한다면, 이것도 역시 역사에 후회를 남기게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지원을 한다'라고도 대답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에 대하여, 아직도 진상규명이 진척되지 않고 있는 점, 또 한일 청구권협정에 대한 해석이 양 정부간에서 어긋나고 있다는 점과 '재일 동포' 상황을 알림으로써 '외교상의 압력'을 발휘하게끔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에 '김 대통령,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고 호소하는 내용의 의견광고 게재 등입니다. 한국동포들의 공감을 얻어, 피해국의 바닥으로부터 진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드높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한국의 의원들에 대한 요청활동 등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무성과 정부에 외교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IV. 활동보고를 검해서

이어서 재일동포들의 활동과 메시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재일 한국인 전 ‘위안부’ 송신도 씨 재판의 진척상황

송신도 씨는 ‘재일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 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재작년 4월 5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며 제소했습니다.

‘청구의 취지’에 보상금액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 왔던 것은 국가의 사죄 및 권리로써의 보상을 강력히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여섯번 구두변론이 행해졌지만, 1월 27일의 6차 구두변론에서는 금액의 명시 없이는 재판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1억 2천만엔 청구를 시도했습니다.

도오조오 히데키 등 A급 전범이 만약 생존해 있었을 경우, 일본 정부가 지급했으리라 상정되는 연금총액을 계산한 액수가 약 1억 1천만 엔입니다. 피해자의 청구액수가 가해자의 연금 액수를 밀도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위로금’의 금액이 백만 엔이라고도 얘기되고 있는 현재,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었지만 (송 씨가 입은 피해 - 몇 번이나 강간당하고 성적 노예가 된 손해, 인신의 자유를 빼앗긴 손해, 전지에의 동행을 강요받아 생명을 위협받은 손해 등 -은 최저 767억 5893만 7500엔으로 시산되었다), 굳이 금액으로 제시하자면 1억 2천만 엔이 된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거듭 국가의 사죄와 명예회복의 중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 우리여성네트워크의 활동

개개인의 활동을 중시하는 스타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년에 4번씩 회보를 발간하고, 한 달에 한번 열리는 정례회를 기본으로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팀을 짜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연극 ‘소리없는 만가’ 상연이나 PCA에 관한 활동, 여자차별철폐에 대한 반박보고서 작성, 정대협외 할머니들 증언집의 번역출판 등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부(副) 교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것을 만들기 위해 회원 5명이 “더 알고 싶은 위안부문제”를 지난 1월에 발행 하였습니다.

* ‘세계각국의 신문에 의견광고를!’ 전후보상실현국제캠페인의 활동

국가책임을 얼버무리는 ‘민간기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일본을 비롯 피해자를 안고 있는 아시아 각 지역, 그리고 세계의 신문에 ‘의견광고’를 게재함으로써 널리 알리는 활동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마이니치 신문, 동아일보, 뉴욕타임즈에 게재하여 한국으로부터 58통, 미국으로부터도 많은 쿠폰(무리아마 수상에 대한 요청목적)이 돌아와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약 3

개월 동안에 170개 단체 1370명의 찬동을 얻었습니다. 3월 1일에는 필리핀의 데일리 인콰이어러에도 게재할 예정입니다.

*** 재일한국민주여성회의 활동과 메시지**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목적으로 결성된 이래로 동경, 오오사카, 오오카이를 거점으로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월 1회의 정례회를 기본으로 하여, 기관지 발행, 자료집 발간 등을 해왔습니다. 90년 이후부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 전후 보상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모임에서의 강연, 학습회 활동을 통해서 여론을 환기시켜 왔습니다. 또 '그대, 조선의 십자가여'를 번역 출판함으로써 각지에서 시 낭독극, 연주회 등이 열려 문제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넓혀졌습니다.

우리는 전후보상문제를 조국통일과 분단극복의 관점에서 운동해 왔습니다. 조국분단과 남북 대립이 전후보상문제의 해결을 늦추고, 남북의 여성들이 손잡는 것을 막아 왔기 때문입니다.

*** 오오사카 '조선인 종군위안부 문제를 생각하는 회' 메시지**

회원 9명은 관서지방에 거주하는 재일 2세, 93년에는 콘돔 '돌격일번' 재생산 사건에 대한 항의활동, 한국의 연극 '소리없는 만가' 일본공연을 전국 13군데에서 실현시켰습니다. 현재, 젊은이에게도 이해하기 쉬운 '종군위안부문제 학습비디오'를 제작중입니다. 비디오는 2부 구성으로 역사 편으로는 '위안부'정책의 사실과정을, 현대 편에서는 전후보상문제, 재일 한국인 문제, 여성문제로부터 이 문제를 검증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족문제, 보상문제인 동시에 기지매춘이나 아시아 각지에서 일본에 온 여성에 대한 강제매춘, 강간 등 현존하는 성폭력사회를 근절하지 않는 한, '위안부'문제는 재생산되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본국, 일본, 세계의 여성운동과 연대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운동을 모색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국내의 운동과 국제적인 압력을 연결하여 운동의 네트워크를 더욱 넓히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실현해 갑시다. '전후 50년'을 맞이한 올해를 문제해결을 향한 확실한 한 걸음의 해로 하기 위하여 함께 전진합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

Chen Yi-Chen

(Taipei Women's Rescue Foundation)

올해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이 패전한지 5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이해가 끝날 때까지 전쟁에 대한 배상요구에 관한 책임을 모두 마무리짓기를 원하고 있다.

타이완의 경우, 배상은 군인으로 끌려간 사람들, 식민지시기에 보통 시민들이 한 저축과 보험 등에 대한 배상을 포함한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사이에 그 배상액수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어서 합의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은 위의 일본 정부의 배상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개개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 그 생활비와 의료비용을 상징적으로 배상하는 방식으로, 공식적인 배상이 아니라 민간기금 프로그램을 결정했다. 공식적인 사죄도 물론 피하려는 의도를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여성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해 왔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제적인 이슈로 되어, UN인권위원회에 상정되었고, 헤이그의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려는 과정을 밟고 있다.

타이완은 보다 어려운 상황에 있다. UN에 가입하고 있지 못하며 목소리를 높일 국제적인 지위나 출구를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들은 열심히 일해 왔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국제적인 포럼이나 회의에 참석해 왔다.

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배상 전략으로, 나는 군인으로 징발되었던 타이완 시민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배상의 과정과 경험을 이용할 것을 제안한다. 2차 대전 중 207,000명이 넘는 타이완 남자들이 일본군대와 군속으로 징발되었다. 그 중 25%에 해당하는 53,000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되었다. 전쟁후 배상 법은 일본국적에 한해 적용되었고, 식민지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식민지인들의 배상요구는 일본 정부에 의해 거절되었던 것이다.

1977년 8월, 타이완의 인권활동가, 일본인 학자, 공무원, 그리고 일본의 인권단체로 구성된 7명의 그룹은 14명의 타이완 전 군인들이 동경지방법원에 일인당 500만 엔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도록 돕게 되었다. 1992년까지의 15년간 3번의 소송에서 3번 다 패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패소에서 타이완과 일본의 관계자들은 "일본군대에 징발되었던 타이완인들의 배상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조직은 일본의 정치권에서 로비활동을 벌였다. 이 위원회의 고문에는 일본의 국회의원과 다른 정치권 인물도 있었다. 정치적인 로비 활동이 법적인 소송과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 1985년 두 번째의 패소가 있었을 때, 일본국회에 "배상위원회"가 설립되었다. 3년간의 활동이 있을 후 일본국회는 1989년 9월, "전쟁시 죽

은 타이완인 유족의 경제적 지원"에 관한 법을 통과시켰다.

12월 중순, 일본국회는 전쟁에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에 대해 일인당 200만 엔을 지급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그 돈은 다음해 9월, 타이완 적십자사의 협력으로 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장기적인 로비활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과 법적인 과정이 정치 기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본 정부의 "민간기금"안은 위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단체가 정부를 대신할 수는 없다. 일본국내의 여론과 국제적인 여론을 이용하고 국회에 영향을 줄 로비그룹을 만들어서, 정부가 일본군'위안부'들을 위한 공식적인 배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올해 내로 배상문제를 종결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희망을 이용해서, 아시아의 여성들이 연대하여 개개인에게 배상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력을 넣으면, 마침내 일본 정부는 우리의 요구를 수락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츠부리아 교코(円谷恭子)

I. 가해국의 시민으로서

가해국 일본의 여성으로서 아픔과 긴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향한 운동을 통해 우리들은 새삼스럽게 지금까지 자신들이 받아온 역사교육의 잘못과, 일본 사회가 걸어온 길의 오류를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개인의 인격형성을 왜곡하고, 나아가 미래 사회 형성도 왜곡하게 됨을 자각하여 이것의 수정없이 문제를 위한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를 고치기 위해 빠뜨려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동시에 우리들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피해자들의 절규를 비통한 마음으로 듣고, 잔혹한 사건에 떨면서, 국가 권력에 의한 여성의 인권침해에 분노합니다.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의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죄와 개인배상, 그리고 책임자 처벌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40여 년이 지나, 피해자 개개인의 고발이 나와서야, 여기에 겨우 다다른 것을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향해서 여러분과 연대하고자, 금후의 방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책임을 회피하는 대체안을 계속 철회시키다

현 무라야마 내각이 강경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모금」 구상에 대해서는 어제, 일본의 보고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미야자와 수상의 형식적인 사죄이후에도 법적인 책임을 지지않고, 「사죄와 반성의 마음」에서 나온 구체적인 대책으로 작년 6월 이래, 「청소년 교류기금」 「아시아 교류센터」 「아시아 여성 자립센터」 등으로 이 문제의 해결과 전혀 관계가 없는 대체안을 제시하여 문제를 종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철회시켜 공식적인 책임의 이행으로 끌고 갈 결의입니다. 대체안의 문제성을 여론에 호소하여 정부 및 관계기관에 압력을 가하는 일을 착실히 해나갈 생각입니다.

작년 7월,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 「아시아 교류센터」 설립안이 제시되었을 때, (일본군'위안부'문제행동네트워크)가 주체가 되어 뉴스를 접한 직후 행동을 개시하여 긴급히 약 2만 명의 서

명을 모아서 정부에 대해 이 안의 완전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2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수는 아니지만, 현재 「민간모금」 반대의 소리가 일본에서 아직은 큰 세력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들에게는 하나의 격려가 되고, 국회의원이거나 관계기관에 압력을 줄 에너지도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속 다루어 온 각지의 단체가 독자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호소 및 항의행동을 하고, 이런 행동의 연속이 조금씩 시민 사이에 공감대를 넓히고 있습니다.

「민간모금」 구상을 억지로 밀고 나가는 정부와 이런 움직임에 끝까지 가담하려는 세력은 아직 강력합니다. 앞으로 ICJ의 권고, 또한 일본의 UN상임이사국가입을 반대하는 국제여론의 힘을 빌려 일본 국내의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하여 활동준비를 현재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의 지지를 바탕으로 「민간모금」 구상을 철회시키는 활동을 강화하고 싶습니다.

2. 국제중재재판의 성공을 향해

끝까지 공식적인 책임을 회피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 한국의 피해자들이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중재재판소(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 PCA)에 가서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기로 결의한 것을 받아들여, 작년 9월 「국제중재재판을 성공시켜 개인 배상을 실현하는 연락회」(이하 연락회)가 새롭게 발족하였습니다. 도쿄 내에서 200명 규모의 정기대회를 하고 피해자 개인들의 결의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대협 대표가 일본측 변호단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서」를 체결하는 일을 위임하였습니다.

그 후 정보의 수집, 분석과 연구, 소책자나 통신의 발행, 집회개최 등을 거듭하면서 정부 및 관계기관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락회」에는 일본 국내 47개 민간단체와 349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중재재판을 위해 결성된 일본의 변호단은 현재 70명으로, 「연락회」와 한국 변호단 38명과 연대하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왔고, 작년 11월에는 일본 정부에, 「신청서」와 함께 「중재합의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24일, 정부는 합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회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 「연락회」 및 변호단은 즉시 회답의 철회와 재고를 요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이 운동을 더욱 더 계속하고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중재재판에 제소할 것을 결심한 피해자들의 승리는 현재 계속 중인 국내 재판과 다른 모든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에서 국가배상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틀림없이 확신합니다. 또한 「위안부」 제도가 처벌되어야 할 국가적 범죄라는 것을 역사의 교훈으로 하기 위해 한 걸음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3. 잘못된 역사교육을 고친다

일본 정부가 이 문제의 진상을 구명하여 공표하는 것은 일본의 역사교육을 바르게 하는 하

나의 창구라고 우리들은 확신합니다. 아시아에서 일본만이 자국 침략의 역사를 제대로 모르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권력지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중이 역사를 개척하기 위해서도 우리들은 이 창구를 열어 확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한편, 민간의 힘으로 규명할 수 있는 사실을 서로 전해서, 검증되는 것을 역사교육을 고치는 한 단계로 의식하고 싶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밟아나가면서 역사교육을 바르게 하는 커다란 세력을 만들어 내고 싶습니다.

4. 시민의 의식 변혁을 근본으로

여론의 지지를 정부에 대한 압력으로 보는 것과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인격형성에 깊이 관계된 측면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이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성과 인권을 유린당했다」고 고발한 그 사실은 우리들의 성의식을 새삼스럽게 검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검토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중층적으로 꼬여서 해결을 방해하는 구조가 있다는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매매춘을 관용하는 통념, 천황제를 온존시킨 남성중심의 구조가 변하지 않은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여성들이 개인으로서 자립을 확립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민족차별, 여성차별에 둔감한 일본사회에서 진정으로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자기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서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자기변혁을 하려는 시민의 일상을 기반으로 사회를 바꾸는 것을 과제로 하려고 합니다.

그 일야말로 오늘날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를 포함한 매매춘 문제 등, 형태를 바꾼 아시아에 대한 가해, 여성의 「성」 유린을 계속해 온 일본사회에서 이 사회를 바꾸는 토양을 확실히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II. 금후 운동의 전개에 대하여

우리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재의 일본의 정치적 상황에 타협하여 정부안에 응하면 안된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일부러 강조해야 하는 것은 최근에 정치가가 「민간모금」이 안된다면 백지로 돌린다, 그 이상의 해결책은 없다 등으로 협박성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민간모금」 구상은 더욱 구체화되어, 일본 적십자사를 창구로 4월부터 반년간 구좌를 개설하여, 이를 위해 정부는 선전과 인건비 등으로 5억 엔의 예산을, 1월 20일에 소집된 제 132회 국회에서 1995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국내에서 보수파에 의한 국회의 전쟁책임 소죄결의에 반대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전국의 전몰자에 대한 추도와 감시를 주요 요지로 한 결의가 다수 현의 의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이 중에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은 한 마디도 언급이 없

습니다. 또한 국가가 계획한 「전몰자 평화기념관」도 후생성은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유아(遺兒)기념관」으로 구상을 되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런 움직임을 저지하는 것과 함께, 일본군「위안부」문제가 결코 해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론에 호소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국외에서 이 문제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가를 호소해서, 일본 정부가 국제여론에 귀를 기울이도록 국회의원과 관계기관에도 압력을 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권의 최고 결의기관인 국회에서 전쟁책임을 인정하고 사회 결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싶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에 대해서도 정부와 별도로 우리들의 손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닐까요? 정부에 대해 발표되지 않았던 자료를 공표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우리들 자신이 조사, 연구 및 청취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그 성과를 서로 교환함으로써 운동에 힘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민간모금」에 반대하는 움직임으로써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피해자들의 농성이 국회 앞에서 있었고, “피해자의 모임”의 할머니들도 일본에 와서 항의 시위를 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지원하는 시민들의 운동은 저변에서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신문에 광고를 싣는 「의견광고 캠페인」도 조직되어 이미 일본, 한국, 미국의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여 피해자의 목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필리핀, 홍콩, 대만, 네덜란드 등의 신문에도 게재하려고 진행중입니다.

또한 송신도 씨를 원고로 하는 재일 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가 있습니다만, 지금 도쿄 지방재판소에서는 “한국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에 의한 소송, 필리핀 여성의 소송,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 의해 억류된 네덜란드 여성의 소송, 시모노세키에서는 관부(關釜)소송, 문옥주 씨의 군사우편저금 환부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법정투쟁은 일본국 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도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작년 7월 UN인권소위원회, 현대노예제작업부회에서 중재재판에 의한 해결의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8월의 인권소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인권침해자의 불처벌 문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도록 권고를 결의하였습니다. 10월 일본에서 열린 동아시아 여성포럼에서도 일본 정부에게 진상규명, 공식적인 사죄, 개인 배상,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행동계획이 채택되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인권소위원회,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부회에서 쿠마라 스와미 보고관은 이 문제를 처벌과 배상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을 결정하고, 이것이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면 UN에서 일본으로 조사단이 파견된다는 정보에 우리들은 커다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기회를 맞아 최대한 여론에 호소할 계획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일본의 외무성이 작년 11월 국제법률가위원회(ICJ)의 보고서를 은폐하여 정치가에게 일체 보여주지 않고, 정치가는 상세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민간모금」 구상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이 ICJ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금후, 도쿄에서 세미나와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국내 여론의 환기와 함께 일본 정부에 대한 압력을 위한 것입니다.

이 아시아 연대회의가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커다란 포석이 되기를 바라며, 또한 8월의 북경회의의 국제적인 무대에서 운동을 강화하기 위한 커다란 발판이 될 것을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본에서의 보고를 마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지 은 회
(정대협 기획위원장)

I.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 운동목표와 지금까지의 활동내용

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의 운동목표

1990년 11월 16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결성된 이후 우리는 세 가지의 운동목표를 가지고 활동해 왔다.

첫째,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같은 반인간적 범죄행위는 인류역사에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명예와 존엄성을 되찾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전쟁 중에 혹은 점령지에서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일어난 강간과는 달리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국가와 군이라는 공권력이 기획하고, 체계적으로 집행한 성노예 제도였고 이 제도를 위해 13-18세의 소녀 약 10-20만 명이 강제로 끌려가서 군의 엄격한 통제하에 정신적, 육체적 고문을 당하면서 노예생활을 당했다. 그리고 일본 패전 후에 이 여성들은 유기 살상 당하였고 일본군이 기록조차 없애 버림으로써 역사 속에 폐기처분 당했다.

우리는 인류역사 속에서 이처럼 추악한 행위를 발견해 내지 못했고, 따라서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가장 추악한 범죄행위라고 규정지었다. 이 범죄행위가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비인도적 범죄행위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또 가해국이 세계 강대국의 한 나라일지라도 반드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리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존해 계실 때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간적 존엄성을 되찾아야 하고, 그러기에는 시간이 별로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운동을 시작했다.

둘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는 가장 처절한 피해현실에 대해서조차 일본의 사죄와 법적 책임, 배상을 받지 못한 한일관계는 평등한 한일관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올바른 해결을 우리 운동의 힘으로 만들어 냄으로써 한일관계를 제대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진정한 아시아의 연대와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포함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전쟁범죄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없이 진행되는 아시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증대는 일본군국주의의 부활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처럼 우리는 역사 속에 은폐되어 있던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한일간의 그리고 아시아의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키고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함으로써 여성의 인권이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져야 한다는 점과 한일간의 평등관계 정립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에 기여코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2. 정대협 의 활동내용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범죄인정,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사죄,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 위령비 건립, 역사교육, 책임자 처벌이라는 구체적인 7대 요구를 제시하며 활동해 왔다.

1) 대일본 정부 활동

우리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 국회를 상대로 로비, 압력활동, 증언집회, 시위 등을 전개해 왔고 특히 일본대사관 앞에서 매주 수요일 12시에 진행되는 수요정기시위는 1995년 3월 1일로 155차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고발장을 94년 2월 일본검찰청에 제출하였으나, 일본 검찰측으로부터 접수조차 거부당했다.

일본 정부가 개인배상의무는 끝났다고 발표를 하자 정대협은 국제법하에서 개인배상의 의무를 판결받기 위해 국제중재재판제소를 결정하고, 일본 정부에게 합의할 것을 요구했으나 공식 거부당했다(95년 1월 24일)

2) 대유엔활동 및 국제활동

1992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공식발언한 것을 시작으로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해 유엔이 적극 나서도록 하는 활동을 계속 중에 있다.

정대협의 유엔활동으로 인해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국제법적 범죄행위로 공인되고 있으며 일본이 법적 책임(사죄, 배상, 책임자처벌)을 져야 한다는 보고서들이 유엔 인권위원회, 인권소 위원회, 현대형노예제분회 등에 제출되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형태를 조사하도록 임명한 특별보고관인 반 보텐 교수의 보고서에 일본군'위안부'문제를 포함하도록 1993년 8월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결의하였으며, 그 보고서는 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또한 19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전쟁중에 일어난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에 대해 조사하도록 특별보고관으로 린다 차베즈를 임명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고, 95년 5월 21-25(예정) 일경 한국을 방문하여 조사할 것이다.

19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를 임명하였고, 쿠마라 스와미는 95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1차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국가에 의한 여성에 대한 폭력부분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95년 말경에는 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을 다루는 보고서에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다.

또한 1994년 2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결의문에서 심각한 인권침해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와 귀쎬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에 대한 불처벌 문제를 다룰 것을 권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ILO 전문가위원회의 위원이자 저명한 국제법학자인 P.N. 바그와티는 지난 1994년 9월 23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이며, 이것은 일본 정부가 93년 8월, 2차 보고서에서 강제성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실을 공식 인정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6월, 아태지역 각료회의에서는 전쟁중에 일어난 성폭력에 대한 가해자는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결의문에 포함시켰다.

1994년 11월 23일, 국제법률가협회(ICJ)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명백히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즉각적인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는 점과 1965년 한일협정의 청구권에는 불법인권침해와 '위안부' 개인의 권리침해에 관한 청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3) 아시아 피해자 및 일본여성단체와의 연대활동

① 남북여성의 연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남한, 북한, 일본여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통해 남북여성이 정신대문제에 대해 서로 연대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유엔 등 국제활동에서도 남북이 함께 포럼, 공청회 개최 등 연대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② 일본여성단체와의 연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은 일본의 여성단체 그리고 학자들, 변호인들을 포함한 양심적인 일본 국민들과의 활동을 통해 한일 양국 국민의 연대와 이해를 촉진시키고 있다. 특히 정대협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PCA에 제소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일본변호사들과 몇 여성단체들 중심으로 조직된 'PCA를 성공시키는 모임'과의 연대를 통해 일본에서의 집회

개최, 시위 등으로 일본 정부에 우리의 입장을 전달해 왔다.

③ 아시아의 연대

1992년 8월 10 -11일, 서울에서 제 1차 아시아연대회의를 개최하여 아시아연대를 조직하였고 이 회의 이후 연례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서로의 활동을 교류하며 연대하고 있다. 아시아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네덜란드 등이다.

4) 피해자 할머니의 생활보호활동

① 92년 12월 1일, 정신대할머니 생활기금 국민운동본부를 조직하여 모금한 것을 93년 7월, 62명의 피해자에게 250만원씩 지급하였다.

② 정부가 일제하 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하여 일시불 500만원과 매월 20만원씩 지불, 의료혜택, 영구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혜택 등을 94년 5월, 국회에서 통과하여 동년 8월부터 시행중이다.

③ 기타 할머니 복지활동

정대협은 할머니복지위원회를 기구내에 조직, 할머니들의 병원알선, 상담, 주거문제, 장례절차 등의 복지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회원단체 중 하나인 불교인권위원회 여성분과에서는 '나눔의 집' 건립준비위원회를 구성, 현재 6명의 할머니들이 나눔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3. 정대협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7대 요구와 경과

정대협 7대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현실

7대 요구	진행 상황
1. '위안부'범죄에 대한 진상의 전모를 공개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정부의 태도변화 . 그런일 없었다며 부인 있었다. 그러나 민간인이 한 일이다. . 군. 국가개입인정, 개인배상할수 없다. . 일본정부 1차 진상조사발표(92.7.4): 강제성 부인 . 2차 조사발표(93.8.4): 강제성인정, 그러나 강제 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 군.관의 주도적 관여는 부인하는 등 부분적 강제성 인정. . 위안부 총숫자/정책입안자, 관리, 운영, 명령체계/위안소생활상태, 패전 후 조치 등에 대한 자료공개는 하지 않음. * 민간연구자 활동 . 위안부제도에 일본군.국가의 주도적 관여, 명령계통조사

2. 범죄를 인정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 제도사실을 인정. · 그러나 '위안부' 제도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범죄, 추업을 행하기 위한 부녀매매금지에 관한 국제협약, 강제노동금지조약, 노예제금지조약 위반임을 아직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음
3. 위안부 범죄사실에 대해 사죄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0.5. 노태우대통령 방일시 일천황 "통석의 엄" · 92.1.8.미야자와 수상 방한, "반성과 사과의 뜻" · 93.11.5 호소카와 수상 방한, "진사드린다" · 95.2. 현재, 연립여당의 국회부전결의안조차 자민당 등이 반대 · 국회결의 사죄와 개인에게 사죄안하고 있음.
4. 법적으로 배상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할 수없다. 65년 한일협정으로 끝난 일이다. 난 일이다.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우호기금'을 만들어 민간모금을 통해 위로금을 지불하겠다. (약 100만엔 이하)
5. 위령비를 건립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되지 않음
6. 교과서에 명기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4년부터 7개 교과서에 부분적으로 포함 ·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범죄성, 성격등은 없이 단순한 용어언급 등 피상적으로 기술
7. 책임자를 처벌하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검찰, 정대협과 피해자가 94.2.7, 제출한 책임자 처벌 고소. 고발장을 접수조차 거부

II. 올바른 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활동방향

1.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금안 철회요구

어제 각국에서 발표한 대로 피해자와 피해국이 모두 반대하는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금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일본 정부로 하여금 이 안을 철회하도록 만들기 위해 크게 4가지 방향에서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는 오늘의 연대회의와 같은 피해자와 피해국 운동단체들의 반대 연대집회를 조직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내용과 의미를 알리는 사업이다. 정대협에서는 이 권고문 중 중요부분(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무의 근거와 내용을 명시한 부분)을 번역하여 법률가, 국회의원, 중요행정기관, 언론에 배부했으며 앞으로는 다양한 토론회를 조직할 예정이다.

셋째는 한일 시민사회의 양심적인 세력과의 연대강화를 통해 민간위로금안 반대세력을 확장

할 예정이다.

정대협은 금년 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하였는데 이를 통해 가장 큰 대중단체인 한국노총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직접적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 공청회에 참여했던 시민단체의 대표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여권,인권문제에서 나아가 인류양심의 문제이며 따라서 시민사회의 양심에의 도전을 통해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논평하였다.

정대협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일본의 시민단체의 동참을 유도할 구체적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특별히 '해방 50주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는 문제제기를 통해 한국의 시민단체, 민족단체를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운동에 동참시킬 예정이다.

내제는 해결이 늦어지면서 연로하신 할머니들이 당하고 계신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줄여드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 국제중재재판소에 제소합의요구와 특별법배상법 제정요구

정대협은 25번에 걸치는 회의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PCA(국제중재재판소)에 가져갈 것을 결정했다. 그 이유는 그동안의 정대협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죄, 배상,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는 다양한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해국인 일본 정부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범죄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국제기구로 하여금 국제법에 근거하여 일본의 행위가 범죄행위인가? 그리고 정신적 물질적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조약으로 완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은 과연 정당한가? 현재 일본의 배상책임은 없는가? 등을 판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정대협으로서는 차선책을 택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밝혀지고 일본 정부가 인정한 범위내에 서만 보더라도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였으나 국제사법재판소에의 제소권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었고, 한국 정부가 제소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민간단체가 접근할 수 있는 국제재판은 PCA 뿐이었다. 한편, 일본으로서는 자기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중요한 기회를 갖게되는 것이었다.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중재합의에 이를 것을 대비하여 할머니들의 위임을 받아 94년 9월 한일 PCA 변호인단(한국38명, 일본 70명)에게 일본 정부와의 합의서를 체결할 것을 위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PCA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는 우리들의 요구를 95년 1월 공식 거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주장의 허구성을 스스로 인정하였다.

이 시점에서 정대협은 일본 정부로 하여금 PCA제소에 응하든지 아니면 국제사회가 요구하

는 대로 사죄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서두르든지 양자택일을 하도록 강제할 수 밖에 없다.(일본이 국제법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 한 별도의 국내법 제정이 필수불가결한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죄,배상,처벌 작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물론 강제할 수 있는 힘의 크기는 우리들 운동의 힘에 의해 그리고 일본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크기에 좌우될 것이다.

3. 유엔관계활동강화

유엔관계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94년 10월 9일부터 시작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없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국제적 서명의 결과를 3월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여하여 유엔에 제출하려고 한다. 그리고 아시아의 연대활동을 통해 이 운동은 계속할 것이다.

둘째, 현재 유엔인권소위원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전쟁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린다 차베즈의 조사,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 특별보고관인 쿠마라 스와미의 조사, 심각한 인권침해범죄자에 대한 불처벌문제 특별보고관인 조아네와 귀쎬의 조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한국방문 초청 및 토론회를 5월중에 개최할 예정이다.

셋째,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포럼을 개최할 것이다. 1995년 8월 30일 - 9월 15일까지 중국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 4차 세계여성대회와 NGO포럼에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계획을 협의중에 있다.

4. ILO를 통한 제소모색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강제노동금지조약 위반이다. 여기서 강제노동이란 '스스로 자원하지 않았음에도 불이익의 위협하에 이루어지는 일체의 노무'를 말하며 특수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극히 세밀한 제한과 조건을 두어 강제노역을 인정하되 이를 위반할 수 없도록 조약에 치밀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추정연령 18세 이상 및 45세 이하 성인의 건강한 남자만이 강제노동에 징집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하여 어떤 경우에도 여성의 강제노동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하여 자행된 일본군'위안부' 총원과 관리가 위의 강제노동금지조약에 위반된다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성에 대한 강제노동은 무조건 금지된

다(제 11조)는 점에서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강제노동조약을 위반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위의 강제노동금지조약을 1932년 11월 21일 조약 제 10호로 비준하였다. 그리고 효력을 발생한 것은 1933년 11월 21일의 일이었다. 강제노동조약은 일단 효력을 발생하면 그 때부터 10년동안 조약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1944년 11월 21일까지는 어떤 경우에도 이 조약의 효력을 배제할 수 없어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실행되던 거의 전기간동안 이 조약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에 의하면 한국의 노동자 단체들이 국제노동기구 헌장 제 26조에 의한 제소로써 일본 정부의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강제노동금지조약 불이행을 제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정대협은 유엔의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ILO에 제소하는 방법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의 확산과 국제적 압력을 가증시킬 길을 모색하고 있다.

5. 진상규명 사업의 진전과 자료관 준비

일본이 진상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당시 연합국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내에서 피해자의 증언을 통해 사실을 밝혀내는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정대협은 사학자, 사회학자, 여성학자들을 중심으로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식민지 시대 자료분석을 통한 백서를 준비중이다. 그리고 정신대연구회와 함께 할머니들의 2차 증언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특히 일본이 패전후 중국에 버리고 온 할머니들의 증언집을 일본의 비인간적 행위가 피해자들의 삶을 얼마나 철저히 파괴했는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자료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해방 5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생활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와 자료전시를 준비중이다.

6. 한국 정부의 적극적 역할요구

한국 정부는 정대협이 낸 질의서에 대한 공식답변에서 65년 한일협정에 책임자 처벌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문서번호 아일 12000-475)과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관해서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아일 22220-422)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국 정부에게 PCA 중재소송에 대한 지원과 ICJ가 권고한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65년 협약에 대한 해석을 요구하도록 운동을 펴고자 한다. 그리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로 하여금 최소한 ICJ의 권고대로 실천할 것을 요구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우리는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 일본 정부의 한치의 변화도 없는 오만하고도 후안무치한 태도는 우리를 분노하게도 하고, 허탈하게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인권을 위해서, 아시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싸워 왔다. 다시 한번 힘을 가다듬어 우리들이 연대한다면 우리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찬조발언
종합토론
결의문

3.1 아시아연대회의 결의집회
아시아연대회의 일정 및 참가자 명단
사진으로 보는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말레이시아 할머니의 피해자 사례발표

마쯔이 야요리
(일본 동아시아여성 NGO 대표)

지금 소개받은 마쯔이 마요리입니다. 아시아여성자료센터의 나카하라 미찌코씨가 만든 자료를 제가 읽었습니다. 나카하라 미찌코씨는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 증언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 몇 분을 인터뷰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공개적으로 자기 경험을 얘기해도 좋다고 말한 분과 인터뷰한 것을 아시아여성자료센터 기관지에 기고한 것을 제가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제목은 (소리를 내기 시작한 로자린)입니다.

저는 작년 11월에 말레이시아에서 전 일본군'위안부'였던 여성이 목소리를 내어 성노예경험을 말할 결의를 했다고 하는 전화연락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지금까지 3명의 일본군'위안부'였던 사람과 만났는데, 그들은 그 이름을 숨기고,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부탁하는 등 아주 세심한 주의 속에서 청취를 하였습니다.

저는 12월에 폐난섬에 사는 한 여성, 로자린을 만나러 갔습니다. 일본군은 1941년 말레이시아 침략을 개시하여 그 다음해에는 전(全)영토를 군정아래에 두었습니다. 로자린은 당시에 두 아이를 데리고 있었고 이혼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루톤에서 작은 방을 빌려서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던 어느 날 밤 3시경 그 근방 일대에 일본군이 왔습니다. 집집마다 젊은 여성이 끌려나왔습니다. 결혼을 한 여성이든, 아이가 있든, 일본군인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자린은 아이들로부터 잡아 떼어지다시피 하면서 트럭에 태워졌습니다. 도착한 곳은 커다란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30명 정도의 여성이 이미 있었습니다. 서너 명의 말레이시아 여성이 있었고, 나머지는 전부 중국계 여성이었습니다. 그 집에는 70세 정도의 아줌마라고 부르던, 영어를 조금 할

줄 아는 일본인 여성이 있어서 그녀가 그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육군 전용위안소로서 그 곳에서 로자린은 하나꼬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졌습니다. 로자린은 집에다 남기고 온 어린 아이들이 걱정되어 견딜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가족이 아이들을 돌봐 주고 있다는 것을 안 것은 상당히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병사가 왔고, 밤에는 사관이 왔습니다. 낮과 밤, 하루 두번 식사가 주어졌는데 위안소에 있는 동안에 돈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바깥 때에는 아침부터 그 군인들이 열을 지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 30명, 40명을 할당받아서 침대에 누운채로 옷을 입을 틈도 없었습니다.

일본군인은 더럽고, 늘 술이 취해 있었고, 난폭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바로 얼굴이나 머리를 때렸습니다. 군인들은 콘돔을 지급받고 있었지만 사용을 싫어했습니다. 나는 한 군인에게 콘돔을 사용해 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그 군인이 얼굴을 막 때려서 귀가 안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한쪽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임신을 해버렸습니다. 병에 걸리거나 임신을 한 여성은 어디론가 끌려가서 아무도 그 후 소식을 들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 여성들이 어디로 끌려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로자린은 아줌마에게 병원에 보내달라고 필사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아줌마는 로자린에게 병원에 갈 수 있는 허기증을 주었습니다.

로자린은 붙잡혀서 수용된 후 처음으로 그 커다란 집을 나왔습니다. 그 커다란 집, 육군위안소는 지금도 같은 장소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톤로크 호텔입니다. 로자린은 아이를 낳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태어난 아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여자아이의 출생증명서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써 넣는 난이 있었습니다. 로자린은 그기에 아무것도 써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무리를 지어서 온 일본 병사중에 한 명이라는 것밖에 그녀는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쓸 수없는 로자린을 불쌍히 여겨서 병원의 일본인 조수가 자신의 이름을 그 난에 써넣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로자린이 지금도 소중하게 보존하고 있는 반세기 전의 그 출생증명서에는 프리라로즈 아버지의 이름은 사카 모토라고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 때 폐낭에서부터 공습이 시작되었습니다. 갈 곳이 없는 로자린은 일본인 의사에게 부탁하여서 1개월 정도 그 병원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해 8월 일본은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전후 로자린은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일하는 동안에 아이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티 라이터의 파클 쓰리터라고 하는 카바레에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많은 배가 폐낭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원들도 있었습니다. 한번 춤을 추면 1달러 20센트를 받았는데, 30센트는 빼앗기고, 그 나머지 90센트를 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 3명

을 데리고, 그리고 그 후에 태어난 아이까지 모두 4명을 데리고 양육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로자린은 두번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전후 그녀는 필사적으로 일해서 4명의 아이를 키웠는데 아이들은 성장하자 차례 차례 집을 떠났습니다. 한명은 브루네에, 로즈는 영국에 나머지는 쿠아라룸프로 갔습니다. 로자린은 나이가 들어 카바레에서 일할 수없게 된 이후부터 복권을 파는 생활을 70세까지 계속했습니다. 지금 로자린은 혼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몸집이 작고, 병에 잘 걸리는 78세가 되는 여성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 결의를 했는가를 듣고 싶었습니다. 로자린은 나의 그런 질문에 아주 많이 찢라놓은 신문 스크랩중에서 타부로이더판 영자신문을 내게 보여 주었습니다. "이 신문을 읽고 나는 결심을 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문기사는 작년 5월, 와세다 대학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여성인권아시아법정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말레이시아 스타지의 바라단 기자가 취재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불현듯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예요". 하고 외쳤습니다.

로자린은 일본군'위안부'의 기사를 신문에서 발견하면 언제나 잘라 놓았습니다. 여성인권아시아법정은 지금까지의 기사와는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전 일본군'위안부'여성들이 자기 자신들의 체험을 몇백명의 청중앞에서 말했던 것입니다. 로자린은 "그녀들이 얼마나 괴로운 마음으로 청중앞에 섰는지 안다. 그녀들이 용기를 가지고 말했다. 나도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지만 이 기사를 읽고 용기가 났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예요" 하고 말했습니다.

로자린은 지금 고독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자린이 내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지탱하는 sisterhood의 모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서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성인권아시아법정은 실은 넬리아 산초씨가 대표로 있는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가 우리들과 함께 연 법정입니다. 그 법정에는 한국에서도 할머니들이 증언하러 오셨고, 재일교포인 송신도씨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정말 여성들, 전 일본군'위안부'였던 여성들이 소리를 내서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성들의 밀바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아쉽게도 말레이시아에는 아직 그런 부분을 밀바침하는 여성들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성인권아시아법정에 참석하여 증언해 주셨던 일본군'위안부'였던 인도할머니의 '고통을 힘으로', '아픔을 힘으로' 바뀌가는 그 말씀대로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질 문

마쓰이 야요리씨에게 질문을 하는 것은 일본내에서 운동하는 단체들이 다가끼 변호사와 같이 피해국에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회유하고, 분열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외국에 나가서 줄리아 포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4만불을 줄텐데 어떻게 하겠는가? 받겠는가?" 한다면 이것은 극히 위협하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도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분열시키는 일본인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일본인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신혜수)

답 변

저도 전체적인 것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사회당 정권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회당은 개인배상이란 것을 당 정책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당의 무라야마 정권이 만들어진 지 2개월 후, 정확히 말하자면 지난해 6월 6일이나 7일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일본에서 민간기금구상이 문제시 된 것을 확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시미즈 스미꼬 씨를 중심으로 여성 8명으로부터 전 '위안부'를 위한 '구제금'을 모으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 때 쯤에 우리 운동 단체로서는 민간기금형태에 대해서 전혀 생각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구체적인 전개과정은 그 해 7월부터 8월에 정부가 낸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로서의 안 즉, 청소년교류기금안이라는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후 아시아교류센타기금 등으로 용어가 바뀌다가 결국, 무라야마 수상의 담화에서 최종적으로 '민간기금'에 의한 위로금 구상으로 시사된 것입니다.

민간쪽에서는 다가끼 변호사 등이 그기에 관여했고, 의원으로는 시미즈 스미꼬 씨가 아주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측이 낸 안을 수상관저에서 받아들였다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때 일본 정부가 말한 것은 '이미 전후 배상문제가 양국간 협정에 의해서 끝났다'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에 와서 배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전 '위안부'들의 경우에는 현재 사는 것이 너무나 안됐으니까 보상에 대신하는 뭔가의 조치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1992년 7월, 제 1차 일본 정부의 조사보고서가 나왔을 때에 당시 관방장관의 담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보상에 대신하는 조치에 대해서 당초부터 미리 머릿속에 두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모금구상안이라는 형태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외무성의 '개인배상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 합류하여 우리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해져 버린 것입니다.

단지 이러한 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6월에 새어 나왔고 정부가 어떤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 점차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운동을 해 왔던 사람들 중에서 민간기금을 찬성한 사람들에게 찬성한 것을 철회하도록 여러 번 요구해 왔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운동을 펼쳐왔던 사람들은 거의 전원이 민간기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 우리는 더욱 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지금 한 명 한 명의 힘은 약하지만 이 연대회의에서 힘을 얻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스즈키 유우코)

재일교포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모금에 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고 있는 모금안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금 정부안은 잘못이니까 지금 있는 안에다가 정부가 돈을 더 출자해서 민간인과 정부가 함께 돈을 내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있습니다.

우리 (재일 '위안부' 재판을 지원하는 회)에서는 기금안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배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정부가 50% 이상을 내도록 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그리고 민간에서도 돈을 모으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에 대해서 우리들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가끼 변호사가 말하는 그 의견이라는 것은 우리도 최근에 알았지만 그 역시 민간기금안으로는 안되니까 정부 돈을 더 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모금의 기본이념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더 없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일본시민운동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본 정부가 정당하게 법적으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민간모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광고를 냈을 때도 일본에서는 160개 이상의 단체가 그것에 찬성하여 의견에 찬성을 보내 왔습니다. 우리들은 현재 정부의 민간모금안에 전면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은 없으며, 또한 그기에 정부 돈을 조금 더 내자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영지)

유엔인권위원회 활동보고

신혜수

(정대협 국제협력위원장)

1995년 2월 19 - 26일간의 유엔 인권위원회 활동보고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고 26일, 어제 돌아왔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기 가서 저희가 활동한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인권위원회에 참석해서 민간단체로서 발언한 것과 둘째로, 인권위원회에 참석한 민간단체 대표들, 또는 국가대표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개최와 지금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임명된 여성폭력특별보고관을 대상으로 한 로비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발언은 모두 8개의 단체가 했습니다. 제가 WCC(세계교회협의회)의 자격으로 발표를 했고, 북한대표, 유감스럽게도 이 회의에는 못 왔지만 제네바에는 2명의 종대위(종군위 안부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위원이 참석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성옥 씨와 권정순 씨가 참석을 했다가 박성옥씨는 아시아연대회의 준비관계로 먼저 돌아가서 제가 돌아올 때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권정순 씨가 제네바에 계속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에서 온 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사무총장인 홍상진 씨 팀, 또 우리 활동을 도와 온 에츠로 도츠카 변호사가 발언했고, 국제법률가협회(ICJ)가 보고서 내용을 요약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인종차별철폐운동(이마다)대표가 발언했고, IED와 제 3세계여성착취철폐운동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발언을 하였습니다.

정부대표로서는 북한, 한국 대표가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의 내용은 민간기금 반대, 일본이 이것을 범죄로 인정하고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가자들이 듣기에는 이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여러 단체에 의해서 제기되고 굉장히 강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제네바에 갈 때마다 했던 것인데, 2월 22일 점심시간에 공청회를 가졌습니다. 날짜가 본회의 일정상 아주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0 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아주 많이 참석한 것입니다. 이 공청회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인권위원회에서 캠페인을 하는 단체사

람들과 또 ICJ의 실무자가 나와서 보고서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왜 일본이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는가 하는 이 연대회의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디카 쿠마라 스와미 라고 하는 스리랑카 변호사가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으로 작년에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의 이런 모든 발언들이 그 보고관이 보고를 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하는 그 의제가 다루어지는 기간동안에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관과 잠정적으로 의논한 것은 5월 8일부터 약 4일간 남한, 그리고 판문점을 넘어서 북한,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방문을 결정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올 초에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일본 정부로서는 일본당국과 의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섭섭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발표를 얻어내느라고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토요일 아침 비행기로 떠날 때 마침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도 함께 같은 비행기를 타게 되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일본 정부가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일본방문을 용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발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에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가 올 때, 오기 전까지 모든 자료를 미리 전달해야 합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것은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가 제네바에 있을 때 일본 정부 사람을 세번 정도 만났는데, 그때 쟁점이 뭐냐하면 '일본이 범죄라는 것을 인정한다. 그 범죄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런데 모든 법적인 책임에 대한 해결은 국제법 하에서 다 이루어졌다. 또 국가간의 조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책임은 없고 그것을 어떻게 도의적으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모색하고 있다'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에게 정말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가 그 때까지 주고,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가 남북한, 일본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그런 의견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관건입니다.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 의견은 일본이 인정했고 그렇지만 국제법상 또는 양국간의 조약상 그것이 해결되었으니까 도덕적인 제스처로 돈을 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도덕적인 것으로는 안되고 반드시 법률적인 책임으로써 배상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는 남북한과 일본을 방문한 후에 별도보고서를 내기로 했는데, 제가 그것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본래는 내년 2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가 있을 때까지 내면 되지만, 제가 빨리 해서 북경대회전까지 준비하여 그것을 내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는 그곳에 일주일 있는 동안에 회의에 참석한 여성 팀과 회의를

했고, 일반사람들을 대상으로 협의회도 했는데 그때마다 자기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가를 말했습니다. 그것은 전쟁 중에 가해진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인데, 그래서 앞으로 남은 2년의 임기동안에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할텐데, 그 첫번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가지고 일본에 조사활동차 간다는 것을 명백하게 몇 번씩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얘기할 것은 일본적십자사를 통한 민간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권위원회 바로 앞의 건물이 국제적십자사 건물입니다. 저는 국제적십자사를 방문해서 국제문제담당관과 유엔 담당자 보엘 씨를 만났습니다. 저는 그 분들에게 일본 적십자사가 본래 의도와 어긋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요청을 하고, 관계되는 자료를 모두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지금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가입 반대에 대한 서명을 국제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중국 내에서도 그런 것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캘리포니아 컴퓨터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중국내 외에 전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이 조직이 되어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1만 명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함께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들의 조직 속에는 해외에 19개 단체들이 연합하고, 중국 내에도 일본인에 의해서 중국인에게 저질러진 범죄행위에 대해서 해결을 촉구하는 데모를 92년부터 해 왔는데, 몇십만 명이 북경으로 행진하다가 중국당국에 의해서 저지 당하고 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 안에도 일본군'위안부'문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를 많이 하고, 앞으로 3월에 미국 뉴욕에서 열리게 되는 여성지위 위원회와 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열리게 되는 북경세계여성대회까지 저희가 힘을 합해서 이 운동을 계속 전개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유엔을 무대로 한 활동은 5월의 쿠마라 스와미 변호사의 방문도 있고, 또 린다 차베즈의 방문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로 고무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 동안의 활동이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쿠마라 스와미 여성폭력 특별보고관의 보고서 속에 일본군'위안부'문제가, 전쟁 중에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 섹션에 포함되므로써 공식적으로 유엔보고서에 기록되었습니다. 라디카 쿠마라 스와미 특별보고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법률적인 선례를 남기고 싶어합니다.

이 문제가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은 것은 바로 보스니아 사태라든가, 방글라데시아 여성이라든가, 르완다나,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을 포함한 전쟁 중에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의 문제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원칙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른 입장을 취할 것인가 하는 것과 일본 정부의 배상을 법률적으

로 받아내는 것이 앞으로 전쟁 중에 여성에게 행해질 수 있는 조직적인 강간, 성노예 등을 방지하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정부가 필리핀이나 한국피해자들을 분열시키고 정부를 상대로 해서 이 운동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에 우리가 항복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충발언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초안이 2월초에 아시아태평양지역준비위원회에 보내졌는데, 보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든가 분쟁하의 여성이라든가 하는 항목은 들어 있는데, 과거 전쟁에서의 폭력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대한 것인데, 과거의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넣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이징 세계여성대회에서도 그것을 강조해서 해 내지 않으면 그 부분이 빠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그것을 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결정되는 것은 뉴욕에서의 여성지위위원회인데, 미국에 가시는 분들이 그것을 생각해서 꼭 넣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일본참가자)

종합토론 및 결의문 채택

사회 : 이 미 경
(정대협 홍보위원장)

* 종합토의 내용을 편집자가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1. 각국의 할머니 생활상황과 지원대책들에 대한 토론

1) 한국 (김혜원 답변)

고령과 복합적 질환으로 안좋은 상황이긴 하나, 정대협 복지위원회 중심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다. 현재, 정부로부터 월 20만원씩 지급받고 있다. 이후 정부에 최저생계비 보장과 의료혜택을 요구할 것이다.

2) 필리핀 (넬리아 산초 답변)

필리핀 할머니들의 상황은 아주 열악하다. 주택구조뿐만 아니라 생활상태가 아주 어렵다. 필리핀 정부로부터도 어떤 지원도 없고, 리라 필리피나에서 돕고는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돈을 내민다면 필리핀 할머니들은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한 돈이 아니라면 받지 않겠다고는 한다.

3) 대만 (첸이첸 답변)

자녀가 없는 사람이 많고, 양자가 있더라도 생활이 어렵다. 92년부터 우리 단체가 전화연락, 상담등을 계속하고 있다. 할머니들의 나이는 70-78세가 많고, 외무부에서 조사를 계속해 왔는데, 앞으로 국가최저의 지급차원에서 피해자에게 900달러 정도의 돈을 지급하겠다고 한다. 정신적 치유도 앞으로 해나가려 한다.

2. 토론주제 선정

- 1) 민간기금을 반대하기 위해 어떻게 할머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2) 국제차원에서의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 3) 8월 30일 - 9월 15일까지의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펼칠 것인가?

3. 선정된 주제에 대한 토론

1) 민간기금을 반대하기 위해 어떻게 할머니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 각국 상황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자.

2) 국제차원에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① 5월 8-15일, 쿠마라 스와미 남북한 방문과 5월 15-22일, 쿠마라 스와미 일본방문이 있을 것이다. 방문후 별도의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다. 아시아연대회의의 모든 영문자료를 쿠마라 스와미에게 보내자. 그리고 실제로 방문했을때 민간기금을 강력히 반대하는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② 5월 21~23일(이후 7월 2-4로 변경, 도츠카의 편지), ICJ초청 동경세미나 (이전에 한국방문 가능)개최예정 : 린다 차베즈, ILO 전문위원인 바그와티, 반보벤, ICJ사무총장 등을 초청하여 국제토론회 예정 - 방문전에 자료를 제공하고, 방문때 어떻게 의견을 전달할지에 대해 미리 협의해야 함.

③ 미국정부를 상대로 로비하자. 예를 들어, 클린턴 부인, 지미 카터 센터, 케네디인권센터 등에 자료를 제공하고, 정치지도자들에게도 알려나가 국제적으로 압력을 넣자.

3) 북경세계여성대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펼 것인가?

강령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의 날' 등을 정하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피해국들이 모두 참여하여 위안부문제를 알리고 요구해야 한다.

4. 결의문 검토

의견나온 것을 가지고 정리하는 것을 각국 대표들에게 위임하고, 결의문을 채택. 완성된 것을 3월 1일 12시 일본대사관앞 집회때 선포하기로 결의함.(다음 페이지 결의문 참조)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의 공동결의문

1995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한국, 필리핀, 대만, 일본에서 온 민간단체의 대표들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진행하였다. 참가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던 북한 대표들이 오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북한 대표들이 발제문을 보내주어 이번 주제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혀 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개 나라의 의사와 연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1995년은 전후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우리 전체의 참가자들은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되는 오늘까지, 일본군'위안부'문제와 같은 명백한 인권범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치솟는 분노를 표시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된다는데 뜻을 같이 한다. 우리들, 회의에 참가한 모든 피자와 대표들은 최근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로기금안'은, 일본 정부 당국이 '위안부'문제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부도덕하고 기만적인 것으로 규탄하고 이에 강력하게 반대할 것을 결의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아시아 각 국을 다니면서 민간위로기금안을 받아 들이도록 피해자와 피해자 단체들을 혼동에 빠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하며, 강력히 대처하기로 한다.

일본군'위안부' 제도는 일제가 아시아의 침략과 전쟁 중에 저지른 가장 잔혹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이것은 일본이 과거 침략과 범죄를 반성하는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군'위안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한, 전쟁의 아픔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가슴속에서, 아시아 민중들의 분노 속에서 지속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전쟁을 반성하지 않은 채, 군사대국으로 발돋움 하려는 일본내의 군국주의자들에 의해 전쟁의 위험성은 남아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과거 뿐만 아니라 오늘과 미래의 여성의 인권과 아시아의 평화를 확립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이러한 폭력을 영원히 추방하는 문제라는 점을 확인한다.

1993년 10월 22일 제 2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에서, 참가자들이 일본 정부에게 요구한 사항들이 아직까지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데 대해 다시 한번 분노하면서, 다음 사항을 재차 일본 정부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1. 일본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제도가 천황제 파시즘과 군국적 국가권력에 의하여 저질러진 전쟁범죄임을 인정할 것.
2. 일본 정부는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태 조사와 피해자 총 수, 국가별 명부 등에 대

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제 3차 보고서를 제출할 것.

3. 일본 정부는 기만적인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하고 피해자 배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
4. 일본 정부는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전쟁범죄와 중대한 인권침해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시효부적용 조약'에 가입할 것.
5. 일본 정부는 상설국제중재재판소(PCA)의 중재에 응할 것.
6. 일본 정부는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자각을 갖도록 과거 침략 역사와 평화인권 사상에 대한 2세 및 시민교육을 철저히 할 것.

우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모든 여성의 아픔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억압과 폭력을 퇴치하고, 나아가서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저지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아시아 여성들의 연대를 소중히 인식하고 그것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다짐하며,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의 행동을 수행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1.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강구한다.
2.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가입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지속한다.
3. 유엔 인권위원회의 특별조사관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아울러 일본 정부가 유엔인권위원회, 국제법률가협회,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이 제안한 권고 등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촉구하는 운동을 편다.
4. 일본 정부가 PCA중재에 응하고 특별배상법을 제정하도록, 각국의 운동을 확대한다. 또한 일본 국회가 국회결의를 통한 사죄, 전쟁반대 결의, 특별배상법 제정을 하도록 요구하며, 특별히 일본내의 양심적인 시민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5. 북경 세계여성대회를 통해 세계에 일본의 비인도적 범죄를 알리고, 세계여성운동과 연대한다.
6. 세계노동기구(ILO)가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금지' 조항 위반을 들어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세계 각국 노동운동 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7. 아시아 피해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일본 정부에게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민간운동을 지원하도록 요구한다.
8. 일본 정부의 '민간위로기금안'을 반대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연대를 위하여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하기로 한다.

1995년 2월 28일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참가자 일동

제 155차 수요정기시위 및 3.1 아시아연대회의 결의집회

사 회 : 윤순녀(정대협 교육.조직위원장)

일 시 : 1995년 3월 1일 정오 12시

장 소 : 일본대사관 앞

순 서

길놀이 (여성민우회 풍물패 '단비')

개회선언 : 윤순녀

목념 : 다같이

수요시위 경과보고 : 윤미향(정대협 사무실장)

대회사 : 이효재 공동대표

각국 대표 발언 :

벨리아 산초(필리핀)

오오가 미야코(일본)

황포강자(재일교포)

줄리아 포라스(필리핀 정신대 할머니)

문화행사 : 한두레

아시아연대회의의 결의문 낭독 : 권희순(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폐회선언

함께 외치는 구호

일본정부는 민간위로기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법적 책임을 이행하라!

전후문제 처리없는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을 반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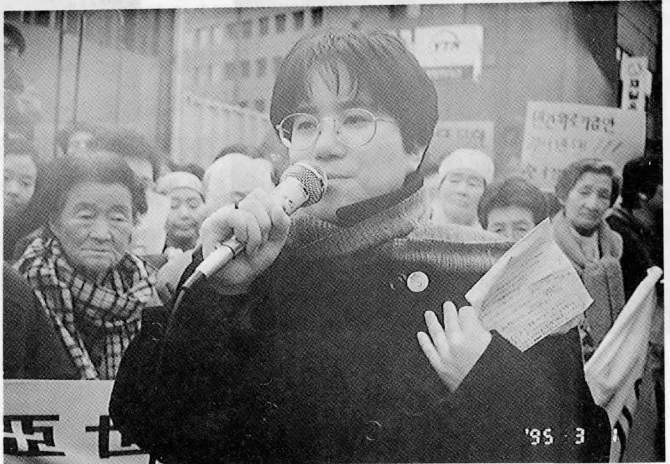
일본정부는 상설국제중재재판소에 응하라!

일본정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 올바른 교육을 실시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여 제3차 진상조사 보고서를 제출하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제도가 전쟁범죄및 비인도적 범죄임을 인정하라!

□ 사진으로 보는 3.1집회





아시아연대회의 일정 및 참가자 명단

- . 주 제 : 전후 50년, 왜 일본군'위안부'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가?
- . 장 소 : 여전도회관
- . 기 간 : 2월 27일 - 3월 1일
- . 회의 일정 :

2월 27일(월)

08:00 아침식사

08:30 등록시작

10:00 개회식(사회 : 김희원 정대협 공동대표)

인사말 :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격려사 : 이우정 국회의원

이세중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박용길 장로(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공동의장)

이연옥 이사장(한국교회여성연합회 초대회장)

박중근 위원장(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내빈 및 참가자 소개(윤정옥 정대협 공동대표)

일정소개(권희순 정대협 아시아연대위원장)

11:00 각국 발표 1 "왜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가?"

사회 : 권희순)

이시카와 이츠코(일본)

양영지(재일교포)

12:00 점심식사

14:00 발표1 계속(왜 민간위로금을 반대하는가?)

줄리아 포라스(필리핀 전 일본군'위안부')

벨리아 산초(필리핀 일본군'위안부'대책위원회 대표)

15:30 휴식

16:00 피메이 초(대만, 전 일본군'위안부')

유허 샤푸(Taiwan Women's Rescue Foundation))

김순덕(한국, 전 일본군'위안부')

김경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총무)

- 17:30 질의응답
- 18:00 자유시간
- 18:30 저녁식사
- 20:00 할머니와 연대하는 밤

2월 28일 (화)

- 08:00 아침식사
- 10:00 각국 발표 2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사회 : 아이코 카터 (일본 그리스도교 부인교총회)
최금춘 (중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상무위원)
넬리아 산초 (필리핀)
첸 이 첸 (대만부인구원회)
김영희 (재일교포, 우리여성네트워크)
- 12:00 점심식사
- 14:00 문화행사 (한두레 소리없는 만가중 일부와 김경란씨의 살풀이 춤)
- 15:00 발표2 계속(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쯔부라야 교코(일본 여성과 인권을 위한 구니타치시민모임)
지은희(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기획위원장)
- 15:40 질의응답
- 16:00 종합토론(사회:이미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결의문 채택
- 17:30 기자회견(각국 대표 참가)
- 18:00 저녁식사
- 19:00 자유시간 ① 나눔의 집 방문 (원하는 사람만)

3월 1일(수)

- 08:00 아침식사
- 10:00 탑골공원 방문 (원하는 사람만)
- 12:00 아시아연대회의 결의집회(제155차 정대협수요정기시위)
장소:일본대사관앞

참석자 명단

1. 필리핀 Lila-Philippina 대표단

넬리아 산초, 줄리아 포라스(전 일본군 위안부)

2. 대만 台北市 婦女救援社會 福利事業基金會

칭 쩡 왕, 이 첸 첸, 피 메이 초, 헬렌 홍

3. 일본 참가단체 및 참석자

- . 일본 그리스도교협의회 : 야마다 에쓰코, 하타자와 아키, 미야오카 아끼코
- . 일본 그리스도교 부인교풍회 : 다카하시 기쿠에, 카타 아이코
- . 일본부인회의 : 다카하시 구미코, 시게토 미야코
- . 우리여성네트워크 : 김영희
- . 제일의 위안부재판을 지원하는회 : 박영자, 박재철
- . 마쓰시로 위안부 집을 보존하는 실행위원회 : 오오시마 후사코, 우쓰 루리코
- . 아시아 여성회 : 마쓰이 야요리, 야마구찌 아키코
- . 조인인 위안부를 연구하는 회 : 황포강자
- . 성과 천황제를 생각하는회 : 이시카와 이즈코, 스즈키 유코, 다카기 다카, 시바 요코
- . 도라지회 : 우가 미야코, 시바자키 하루코, 시미즈 마사오
- . 위안부문제 여성네트워크 : 모리카와 마치코, 최 진, 미요시 로르코
- . 필리핀 위안부피해자들과 함께 하는 루나스회 : 하라다 케이코, 시노미야 사나에
- . 보랏빛회 : 방청자
- . 재일대한기독교회전국여성연합회 : 양영지
- . 여성과 인권을 위한 구니타치시민회 : 츠부라야 교코, 아카쓰카 노부코, 이토 마사코, 타케다 테루요, 유키모토 미수미, 유키모토 시마, 오다지마 사다코, 미추이 로로코, 카사하라 미치코
- . 일본기독교회 위안부문제를 생각하는 회 : 쓰무라 사치코, 미야케 카즈코
- . 도쿄 카톨릭의 정의와 평화위원회 : 오오구라 카즈요시, 우에하라 카츠리코, 타카시마 타츠헌
- . 초가포 : 노부카와 미츠코
- . 후쿠야마 위안부연구회 : 이소 사치코
- . 생활과 평화를 연결하는 회 : 무리카미 야스노

· 전후보상국제캠페인 : 아카무라 미치코

5. 한국참석자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실행위원 :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권희순, 김경희, 지은희, 김신실,

김혜원, 송경자, 신혜수, 아마시다 영애, 윤문자, 윤순녀, 이미경, 정진성

· 아시아연대회의 준비위원 : 안상님, 정숙자, 한국염, 이경실, 오종예, 허진희, 신혜숙

· 법률전문위원회 : 이장희

· 할머니복지위원회 : 신복순

· 아시아연대회의 실무자 : 윤미향, 임정덕, 강현아, 구본숙, 김신아, 김현주,

정은숙, 유태희, 윤진희, 이미은, 이민정, 이해정, 장영애, 정춘숙, 신경희,

안은지, 조혜숙, 김경의, 임수정, 허윤정

· 할머니 : 강덕경, 강순애, 김복선, 김순덕, 김은례, 문옥주, 김상희, 문필기, 박두리,

심미자, 윤순만, 이영숙, 이용녀, 이용수, 황금주, 이옥선

·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 양순임

· 태평양전쟁희생자한국유족회 : 이금주

· 부산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김문숙

· 새세상을 여는 천주교여성공동체 : 김재원, 한완수, 신이심, 송기복, 최주영, 최옥순

·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전국연합회 : 나선정, 강성혜, 박계자, 김경숙, 이정희

· 한국여성민우회 : 윤정숙, 이금라, 정은숙

· 여성의 전화 : 이상덕

· KNCC여성위 : 배월수

· 한국여성단체연합 : 이영순, 한명숙, 장미화

· 대구여성회 : 이정선, 신인숙

· 충북여성민우회 : 최성미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 : 고은실, 김현숙

· 불교인권위원회여성위 : 혜 문

· 여신학자협의회 : 정영순, 이옥녀, 꺾분희, 최만자

· 기독교민회 : 김숙임

· 예장(통합) 전국여교역자연연합회 : 안구선

· 예장(통합) 여전도회전국연합회 : 이연옥, 황화자,

·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윤치경, 김순애, 박혜덕, 황화자, 김복숙, 남숙현, 양용순, 안경선,

전춘려

- . 한국기독교장로회전국여교역자협의회 : 심은정, 박성자
- . 정신대연구회 : 조혜란, 여순주, 신영숙, 강정숙, 안연선, 오푸야마 요코
- . 국회의원 : 이우정, 김원웅
-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 김동완, 김경남
- . 대한변호사협회 : 이세중
-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박용길, 이수갑
-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이연숙, 오순옥,
- .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 김윤옥
-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 장완익, 배금자, 박찬운
-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박중근, 조한천, 김영자, 유경석, 김승진
- . 카톨릭 : 김화영, 박창일, 문규현
- . 일본문제대책연구협의회 : 박현서
- . 여성신문 : 이계경, 김수자
- . 개인참가 : 윤영애, 김영, 김경란, 인재근, 윤동순, 이경희, Bertra Laney, Sonia Strawn, Barbara Park, Lori Crocker, Sasha Hampson, 하비
- . 대동홍업사 : 정지영, 도동환, 서정민, 안병기, 박건섭
- . 협조해 주신 분들 : 한두레(소리없는 만가 공연팀), 단비(여성민우회 풍물팀), 보임(행사 사진및 비디오 촬영협조), 라이온스 k지구 봉황크럽(3.1 점심제공)



3. 1걸의집회에서
박두리할머니와 김은례할머니

사진으로 보는 제3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연대회의



◀첫째날, 등록대에 접수하고 있는 모습



◀ '민간위로금을 왜 반대하는가?' 에 대한 입장 발표 (한국의 김순덕 할머니)



◀ 필리핀의 줄리아 포라스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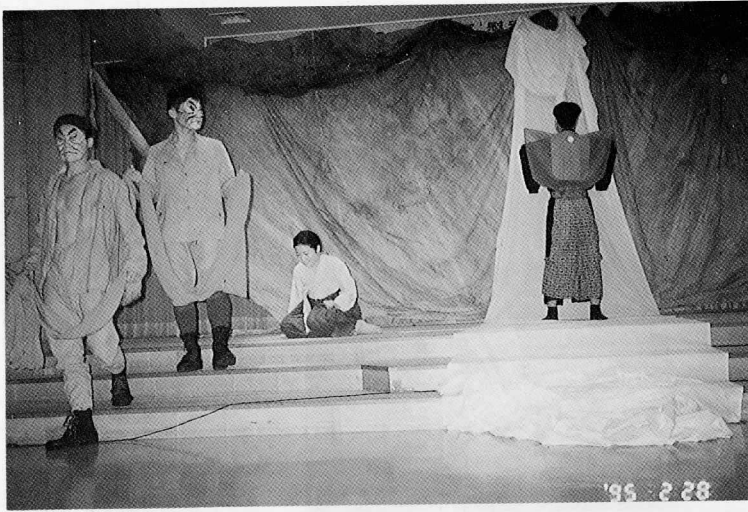
◀ 할머니와 연대하는
밤의 모습



◀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할 것
인가?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각국 대표들



◀ 발표를 듣고 있는
참석자들



▼ 한두레의 공연
▲ (소리없는 만가중 일부와
살풀이 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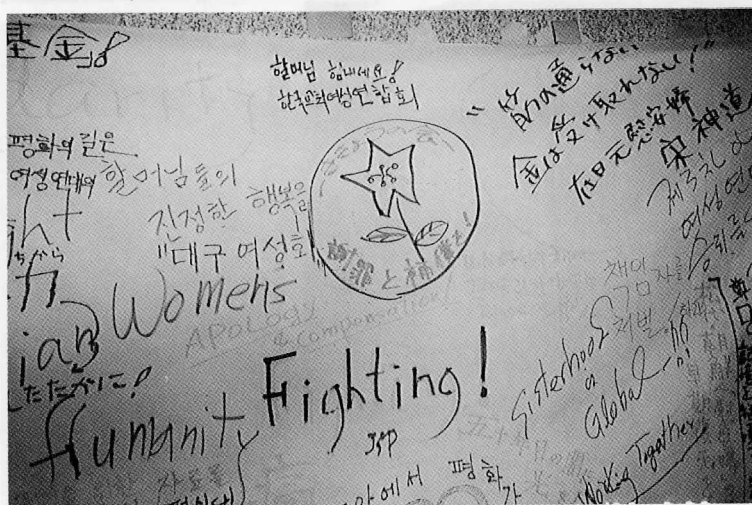
◀ 종합토론



◀참가자들이 모두 한 자리에서 찰칵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전시



◀“연대를 위해서” 각자의 염원을 담아서 한마디씩

부록

정대협 활동일지

활 동 일 지

(1993년 9월 1일 - 1995년 3월 28)

- 1993년 9월 5일 일본 사회당 야마하나 위원장 접견. 서한 전달
(이효재 대표, 이미경총무)
- 9월 8-17일 독일 국제여성대회 (제목 : 인간의 존엄-여성의 존엄-전쟁과 강간) 참석
(참석자 : 윤정옥, 지은희, 문필기 할머니)
- 9월 22-24일 나가사키 어머니회 집회 참석 (야마시다 영애, 강덕경, 이영숙)
- 9월 23일 이효재, 윤정옥 대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올해의 여성상' 수상
- 10월 1일 호소가와 수상에게 보내는 위싱턴정대협, 공개서한 위싱턴포스트지에
광고 게재
- 10월 8일 일본정부, 군인군속 자료(위안부 10인 포함) 한국정부에 제공
- 10월 21-25일 일본에서 제 2차 '강제중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10월 23일 강제중군위안부 문제 대책활동 기금 마련위한 들국화 라이브콘서트
(강릉), (지은희 참석)
- 10월 25일 한두레 일본 순회공연 시작
- 10월 30일 정신대문제 자료집 IV 발간
- 11월 3일 미하원의원 24인 호소가와 총리에게 일본군'위안부' 문제 관련 서한
- 11월 6일 호소가와 일본 총리 방한 연대집회
- 11월 7-8일 평양국제토론회에 이효재, 윤정옥 공동대표 참석
- 12월 7-8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책임자 처벌 문제로 일본방문
(윤정옥, 이미경, 야마시다 영애, 박원순변호사)
- 12월 18-19일 제 2차 한일합동연구회 개최
- 12월 23일 정대협 100차 수요시위
- 1994년 1월 20-25일 제 5차 오카야마 반차별평화 국제포럼 참가(이미경, 김복동)
- 1월 26일 고발장 관련 일본단체 설명회 (이미경)
- 1월 28일 민주당 정신대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
- 2월 1일 일본 도라지회 방문, 할머니들께 생활비 보조 50,000원씩 발송

- 2월 7일 일본검찰에 일본군 '위안부' 책임자처벌 고소,고발장 접수
- 2월 11일 오카야마 증언집회 참석 (김신실, 박옥연 할머니)
- 2월 9-13일 와싱턴 집회 참석(신혜수)
- 2월 14-26일 유엔인권위원회 참석(신혜수)
- 3월 2일 일본 법무대신, 검찰총장에게 고발장 거부에 대한 항의문
- 3월 10일 민주당 정신대대책위 위원들과 간담회
- 3월 12일 전금화 할머니 사망
- 3월 18일 전금화 할머니 영결식
- 3월 23일 김영삼 대통령 방일에 즈음한 제 111차 수요시위 전개
- 4월 2일 문옥주할머니 우편저금건 관련 일본 방문 (김신실, 문옥주할머니)
- 4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관련한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정대협 영문 자료 발송
- 5월 4일 시미즈 스미코 일본 사회당의원 방문하여 민간위로금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전달
- 5월 4일 나가노 법무상 망언, 정대협 성명발표
- 5월 7일 나눔의 집 할머니들, 천호한의원 무료 칫진료
- 5월 9-10일 불교 총무원, 정신대할머니 및 장기수할아버지 설악산 관광
- 5월 15일 일본의 우에스키, 아이코 카터, 도츠카변호사 방문하여 PCA 회의
- 5월 18일 여성교회, 할머니들을 위한 예배, 점심대접
- 5월 31일 윤정옥 대표, 보사부 포상
- 6월 2일 일본방문, PCA제소를 위한 한,일 회의
(권희순, 지은희, 박원순 변호사, 야마시다 영애)
- 6월 10일 미국 방문, 증언집회 및 시위(이효재, 김혜원, 황금주 할머니)
- 6월 13일 중국의 정학수 할머니 초청, 나눔의 집 방문
- 7월 5일 민주당 외무통일위 위원들과 간담회
- 7월 6일 재일교포인권탄압규탄집회
- 7월 15-22일 윤정옥 대표, 일본강연
- 7월 20일 일수상 방한에 즈음하여 청와대 앞 김영삼 대통령 면담요구 시위
- 7월 23일 무라야마 일 수상 방한 규탄시위
- 8월 3-17일 신혜수 위원장, 유엔인권소위원회 참석
- 8월 10일 광복 49주년 정대협 수요시위
- 8월 29일 일본정부의 민간위로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대한변협과 공동주최)
- 8월 31일 무라야마 총리 담화 발표(평화우호교류계획 및 민간위로기금안)

- 9월 2일 ICJ 일본군'위안부'문제 권고안 발표
- 9월 14-18일 PCA를 성공시키기 위한 집회, 위로금반대 기자회견 및 시위 참석차
일본방문(참석자 : 윤정옥, 이효재, 지은희, 권희순, 김혜원, 김신실,
김경희, 윤미향, 강덕경, 김순덕, 박옥련, 박두리, 문필기)
- 10월 15-22일 미네소타 강연 참석 (정진성, 강덕경 할머니)
- 10월 18일 외무부 이주국장 면담
- 10월 24-25일 할머니 단풍놀이
- 11월 4일 정대협 사무실 기사연발딩으로 이전
- 11월 4-13일 5인 여류화가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전시회
(제목 :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 11월 13일 YMCA 일본연구모임 정신대문제 홍보와 기금마련 위한
일일찾집 및 강연
- 11월 16,30일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가두서명운동
- 11월 22일 ICJ, 일본군'위안부'문제 최종보고서 발간
- 11월 23일 정대협 4주년 행사
- 11월 28일 정대협 PCA한일 변호인단, "일본군'위안부'문제의 국제법적 해결을
위하여" 세미나 개최
- 12월 7일 일본여당내 전후 50주년 프로젝트 팀 내 '중군위안부 등 소위원회'
중간 보고 발표(민간모금 구상안 중심)
- 12월 16-19일 일본의 PCA제소 관련 집회 참석 (지은희, 권희순)
- 12월 20일 독립기념관 방문, 자료 요청 (이효재, 윤정옥, 김경희)
- 12월 23일 도츠카대표와 실행위원들 면담
- 12월 26일 한일문제연구소 방문 (이효재, 윤정옥, 김경희, 이미경)
- 12월 29일 정신대자료집 VI(PCA한일변호인단 토론회 보고서) 발간
- 1995년 1월 6일 제4차 베이징여성대회에 참가신청서 제출
- 1월 10일 소식지 6호 발간
- 1월 11일 김수환 추기경, 무라야마일본총리에게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조속한
해결 촉구하는 서한
- 1월 11일 대한변협, 김영삼대통령에게 건의서 제출
- 1월 18일 일본NCC에 '지진에 대한 유감' 서한 발송(수요시위 1회 씩)
위로금 보냄
- 1월 20-28일 윤정옥 대표, 무한지역 할머니 초청 관련하여 중국 방문

- 1월 24일 케네디 인권센터에 일본군'위안부'문제 관련 서한 발송
- 2월 8일 북한, 아시아연대회의 대표 파견하기로 발표 (이후 오지 못함)
- 2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대협 공동 주최로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국제조약과 일본군'위안부' 문제 에 관한 토론회 개최
- 2월 27일 여전도회관에서 필리핀,대만,일본,한국 4개국이 모여
- 3월 1일 "전후50년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란 주제로 제3차 아시아연대회의 개최
- 3월 1일에는 155차 수요시위 전개
- 대회기간 중 전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의 그림전시
- 일본군'위안부'관련 기록사진 및 일본군 만행에 관한 사진 전시
- 3월 17-28일 뉴욕에서 열리는 여성지위위원회 참석 (신혜수, 권희순)
- 3월 24-27일 필리핀 AWHRC와 정대협 공동주최로 뉴욕에서 포럼개최
- 제목 : International Panel of Legal Experts on Post-War Compensation for Survivors of Military Sexual Slavery
-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가입반대 국제서명 뉴욕의 유엔본부에 1차 전달

판 권

정신대자료집 VI

제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 보고서
"전후 50년, 일본군'위안부'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았는가?"

펴낸 날 1995 년 3 월 31 일
펴낸 곳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주 소 120-012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2가
35번지 기사연빌딩 305호
☎ 365-4016 / 365-4017 (FAX)